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尹 錫 曉

일 제 말 ‘민족주의계’ 지식인의 식민담론
수용과 현실인식

Korean Nationalist intelligentsia's Accommodate of Colonial
Discourse and Usual Perception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2 0 0 6 年

漢 城 大 學 校 大 學 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都 承 炫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尹 錫 曉

일제말 ‘민족주의계’ 지식인의 식민담론
수용과 현실인식

Korean Nationalist intelligentsia's Accommodate of Colonial
Discourse and Usual Perception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 0 0 6 年 6 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都 承 炫

都 承 炫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 0 0 6 年 6 月

심사 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친일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데 있다. 이 논문은 친일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지식인의 친일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제말기의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던 지식인들의 글들을 분석하였다.

대륙침략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전시동원체제 수립을 강화했다.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내선일체가 강제되면서, 사상통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졌고 물적·인적자원이 동원되었으며, 조선의 지식인들은 감시받고 억압되어 일본에 경도되거나 전향하게 되었다. 결국, 지식층 대부분이 자의든 타의든 체제에 순응하거나 침묵하면서 이들 중 다수는 적극적으로 친일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상탄압의 외부적 요인 외에도 1920년대, 특히 만주사변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으로 조선의 독립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식인들 다수의 타협적 경향도 있었다.

이 시기 친일활동의 전형은 기고를 통해 일본제국주의를 선전하거나 협력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대부분의 글들은 전쟁에 대한 협력 또는 예찬, 그리고 내선일체와 황민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 주된 논지는 조선인이 내선일체를 완수해야 하며 천황의 신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내선일체를 완성하고 천황의 신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여기에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전으로 강조했다. 친일의 길로 들어선 지식인들의 인식과 논리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과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식층의 상당수가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강대국 중 하나로 여기면서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곧 독립보다는 조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순응해야만 하는 것으로 단정 지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조선도 함께 망한다는 공동운명체적 관계로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친일로 경도되게 만들었다.

지식인들에게 있어 당시의 식민담론은 친일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계기되었다. 조선인에게 논리적 폭력을 반복하고 전체주의화를 강요했던 식민담론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새로운 주체로 만들고 일본제국주의 안에서 동일한 주체로 형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통치의 내면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담론은 조선 지식인들의 친일문제가 윤리 도덕적 문제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친일행동의 모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적 주체성의 형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일제말기에 이루어졌던 식민담론의 전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식민담론과 친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목 차

국문 초록

I. 序 論	1
II. 일제말 식민담론의 성격	6
1. 일제말 침략전쟁의 추이와 식민담론의 생성	6
2. 戰時下 식민담론의 확대·강화와 그 의도	12
1) 침략의 합리화와 아시아주의	12
2) 전시동원의 정당화와 ‘鍊成’의 강제	15
3) 통제와 동원 조직의 결성	20
III. 조선지식층 내부로의 식민담론 수용과 내면화	24
1. 차별에서의 탈출과 내재된 열등감의 표출	24
2. ‘민족의 부정’과 ‘국민화 담론’의 형성	31
3.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제국과 운명공동체로서의 ‘지도민족’ ...	37
4. 친일에 대한 신념 획득과 열정적 행동	45
1) 자기최면에 의한 신념의 획득	45
2) 친일정서의 창출과 열정	49
IV. 結 論	55
참고 문헌	59
ABSTRACT	64

I. 序 論

일제말기는 한국 민족주의 사상 가장 불행한 해였다. 1931년 5월에 신간회가 해산되고 9월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 해를 고비로 하여 한국 민족주의는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일본의 국력이 신장되고 대외팽창이 가속화될수록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그 명맥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가중되는 일본의 탄압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지하로 잠적하게 되었으며 민족주의 운동의 경우도 강력한 황민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운동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게 되었다. 이는 확대일로에 있는 일본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협하면서 살길을 타개해 나가느냐의 기로에서 어느 한 쪽을 분명히 해야 함을 뜻했다. 이로 인해, 끝까지 강압적인 전향을 거부하고 투옥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했던 여러 지하조직의 항일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기로에서 민족을 등지는 일군의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사회 내에서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려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조선의 내셔널리즘이 파시즘(국가주의)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포섭 또는 흡수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피억압민족으로서 조선이 갖는 내셔널리즘이 지배민족의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대립과 저항이 아닌 순응의 길로 나아갔다는 점은 매우 주목된다. 주지하듯이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방략(方略)으로 의미를 지닌다. 나라를 잃고 근대화에 뒤처진 민족으로서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무기로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나름의 대응책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선의 민족주의로부터 전체주의적 성격을 추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조선의 민족개념에는 ‘集體的 自我’로서의 민족만이 존재할 뿐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

‘민족주의계’의 수많은 계몽담론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은 민족 혹은 민족의 정신으로 수렴될 때

만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민족주의가 지닌 한계와 그 이념적 강직성으로 인한 전체주의적 성격을 간파할 수 있다.¹⁾ 이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의의를 가지려니와, 여기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조선의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자민족 중심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일본의 식민담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왜, 그러한 길을 갔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하겠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관련하여 조선의 민족주의 동향에 대해서 이명화²⁾의 경우 민족주의자들의 변질 요인을 일제의 탄압과 회유이외에 문명개화론에 함몰된 내적 속성³⁾에서도 찾음으로써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전시체제기의 민족주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정태현⁴⁾은 1930년대 ‘만주부름’과 함께 기대되는 조선인 유산층의 이익창출과정을 언급했다. 여기서 이들 유산층의 계급적 토대 자체가 일본제국주의와 결부되었음을 밝혔지만 사상적 측면보다는 주로 경제활동 측면에 주목했다. 공통적으로 민족주의 우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연구 성과와 함께 이 시기 조선 지식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전향 문제’⁵⁾를 포함하여 주로 ‘친일파연구’⁶⁾의 범주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범주의 연구는 지식인의 친일 활동 규명에 주력하여 이 시기 지식인 문제를 특수한 시기의 특수 문제로 격리시킴으로써 불가피하게 연구시각 · 분석영역

-
- 1) 민족주의가 갖는 전체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명구의 논문,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2)과 이지원의 논문,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참고 할만하다.
 - 2) 이명화, 「민족말살기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민족주의자들의 변질과 협력의 논리」,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아세아문화사, 1999), pp. 140~178.
 - 3) 이 문제에 대한 선구적 연구 성과로 자본주의 근대화사상의 형성과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 서중석의 논문, 「한말, 일제침략하의 자본주의근대화론의 성격」(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7)이 있다.
 - 4) 정태현, 「1930년대 조선인 유산층의 친일논리와 배경」, 같은 책, pp. 78~101.
 - 5) 국내의 전향문제에 대한 연구 현황은 지승준, 「1930년대 사회주의진영의 ‘轉向’과 大東民友會」, 『史學研究』 제55·56합집(1998, 9), pp. 747~766 참조.
 - 6) 친일파연구의 논리와 현황에 대해서는 김삼웅 · 이현종 · 정운현 공편,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학민사, 1990)를 또는 이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물(『친일파 99인』, 『청산하지 못한 역사』 등)들을 참조.

의 도식화와 협애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범주에 대한 연구가 국문학 분야에서 친일문학적 관점으로 주로 다루어짐으로써 각 전문 영역에서 다양한 수위와 편차를 보이며 표출된 지식인의 체제편입 논리와 현실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폭넓게 연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접근은 1966년 『親日文學論』⁷⁾이란 임종국의 저서를 통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 졌다. 임종국은 친일관련 1차 텍스트들을 풍부하게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친일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왔으며, 이 문제를 문학적 측면이외에 정치·사회적인 측면으로도 적용시킴으로써 분석의 틀을 다양화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친일의 내적논리에 대한 분석 시각은 고려되지 못했다. 이후 이러한 분석 시각은 친일문제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인 측면⁸⁾에서 이루어지면서 보다 세밀하게 다루어졌지만 주로 대표적 인물에 편향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은 그려지지 못했다.

따라서 일제말기 친일논리의 변화상과 그 특질을 총체적으로 해명하는 분석시각은 극히 빈곤했다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로 대표되는 일본제국주의의 皇民化政策의 영향만으로는 당시 지식인들의 굴절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당대의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긴밀하게 대응되고 있다는 연구⁹⁾와 함께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

7) 임종국, 『親日文學論』(평화출판사, 1986).

8) 여기서는 친일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계열의 인물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몇 명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광수에 관한 논의로는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한길사, 1986)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태학사, 1998) ; 이종오, 『이광수를 위한 변명』(중앙일보사, 2000)이 있으며 최재서에 관한 연구는 김동식, 「최재서 문학비평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이은애, 「최재서 문학론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윤성자, 「최재서의 친일문학론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양숙, 「최재서 문학비평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3)가 있다. 최남선에 관한 연구는 홍일식, 「최남선연구」(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64) ; 류시현,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가 있다. 이밖에 박정신, 「윤치호 연구」(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77) ; 예지숙, 「일제시기 김활란의 여성론과 대일협력」(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등이 있다.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인물에 치중되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김재용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역락, 2003) 와 『제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역락, 2003)에 실린 개별 논문을 참조할 만하다. 이외에 김재용은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소명출판사, 2005)을 통해서 일제말기 일본어로 된 문학은 모두 친일문학이라는 협애한 언어민족주의적 시각과, 일제말기 친일단체에 가입한 이들을 모두 친일지식인들로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이어 “자발성을 띤 경우에만 친일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 항상 내적 논리가 있다”고 서술했다.

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연구¹⁰⁾도 있었다. 이렇게 일제말기의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친일문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각 시기 친일에 대한 인식의 정합성을 한 차원 높이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밝힌바와 같이 아직은 대상의 차원이 개인적인데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내용도 주로 친일활동을 밝히는 단편적인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담론 속에서 체제협조와 ‘內鮮一體’의 길을 걸은 일부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사상변용의 인식 구조, 체제협조의 이념적 지향성과 그 귀결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을 ‘민족주의계’ 지식인들로 한정하는 것은 앞서도 잠시 언급한대로 1930년대, 대대적인 사회주의 탄압과 전향정책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지하화 되었고 불법화되었다. 그에 반해 민족주의 운동은 공개된 영역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이는 민족주의 운동이 조선인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뜻하며, 그만큼 일반 대중을 움직일 토대도 강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무한의 전시동원을 의도했던 일본에게 있어서 민족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제말기 신문·잡지에 실려 있는 친일 성향의 글을 통해서 식민담론의 수용 양상을 파악하고 그 주된 논리를 알아보는 것은 그동안 탄압과 수탈로 그려졌던 일본의 단선적인 지배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배논리에 대한 지식인들의 주관적인 내면화 과정과 이것의 담론화 작업에 대한 여러 분석들은 일제말기 친일의 성격을 가늠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식민담론의 수용 모습과 친일 논리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내적 논리와 사상적 경향, 또한 지식인간의 차별성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이상을 토대로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2장에서는 먼저 일제말기 식민담론의 성격과 그 의도에 대해서 살펴 볼

10)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주의로 대표되는 일본의 식민담론이 일제말기 침략전쟁 수행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 그 모습을 달리해 갔으며, 식민지 조선에는 어떻게 수용되어 갔는가를 알기 위함이다. 즉, 滿洲事變으로 촉발된 일본의 대륙팽창 야욕은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그들을 전쟁상태에 놓이게 했고 그러한 장기간의 전쟁수행은 제국 내외의 사회전체를 戰時에 알맞게 재편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戰時體制의 구축은 대외적으로는 침략전쟁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침략을 왜곡하고 미화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창출해 내게 만들었고 대내적으로도 전시에 따른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들과 장치들을 고안하게 만들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되었던 ‘皇國臣民의 鍊成’과 ‘단체의 조직’을 통해서 당시의 식민담론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확대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도했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일제말기에 생성된 식민담론들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수용되고 내면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동원을 정당화했던 식민담론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통해서 식민담론과 당시의 친일담론들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분석은 당시 전시동원을 정당화 시켰던 식민담론 속에서 새로운 주체로 도약하려 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일제말 식민담론의 성격

1. 일제말 침략전쟁의 추이와 식민담론의 생성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화하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해가던 일본은 1920년대의 짧은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가 막을 내리고, 1929년 세계대공황을 거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1920년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일반적으로 정치구조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통한 의회정치의 확립을 말한다. 일본에서 이러한 정당정치로의 전환은 외형적인 민주화와는 달리 재벌과의 밀착으로 대표되는 부패와 타락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극도의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되었고, 관료와 군부 역시 정당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어 정당정치인에 대한 일련의 테러, 즉 군부쿠데타로 이어졌다. 이렇듯 1930년대 군부가 급속하게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정당정치의 부패와 타락이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후 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군부 독재체제가 된 일본은 1937년 蘆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일 전쟁에 돌입했으나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마침내 전면전이 되고 장기화 되어갔다. 의도하지 않은 전쟁의 장기화로 전면전쟁을 치르게 된 정부와 군부는 일본국민들의 협조체제 수립을 위해 國民精神總動員 실시요강을 마련하고, 1937년 10월에는 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운용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민지에서의 수탈도 가속화하였는데 특히 조선은 전장과 거리상으로도 가까워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보급기지로서의 존재가치가 급속히 대두되었고 그 결과, 전쟁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인력과 전시요원이 조선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동원·보급되었다.

일본은 장기화되어 가는 중·일 전쟁을 지속시키고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南方으로의 진출을 서둘렀다. 독일, 이탈리아와 3국동맹을 체결하고, 1941년 7월 베트남에 진주하자 미국·영국과의 대립이 격해졌고, 이에 같은 해 12월, 일본이 美해군의 주요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반년 만에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제압했으나 미국의 반격으로 전세는 뒤바뀌기 시작했다. 결국 1945년 4월 미군의 오키나와(沖繩) 상륙과 더불어 8월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투하되었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면서 전쟁은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종결까지의 15년 동안 늘 전쟁을 수행 중이었다.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장장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했으며, 위정자들은 어떤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식민지 수탈을 정당화했을까. 1930년대의 일본은 안으로는 ‘國體明徴’¹¹⁾을 내세우며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하고 완전한 가족국가체계를 추진하였고, 밖으로는 ‘八紘一宇’¹²⁾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확대일로의 전쟁을 지속시켜 나갔다.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과 ‘천황절대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일본의 군국주의는 사회 전반에 대해 완전한 조직과 통제를 꾀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통제의 주체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전쟁에 전쟁을 거듭했던 것이다.¹³⁾

일본의 군국주의가 ‘국체명징’을 이유로 일본사회 전체를 철저히 조직하고 장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천황의 인정(仁政)을 세계만방에 퍼겠다는 ‘팔굉일우’의 이념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선 중·일 전쟁만 하더라도 개전 당시의 명분은 포악한 중국을 응징¹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응징수준이 아니라, 국가전체가 총동원되어야 할 만큼의 총력전으로 치닫게 되었고, 서구 열강과의

11) 1937년 문부성이 낸 『國體の本義』에는 그 서두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인 천황이 황조의 신직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국체이다”라고 쓰여 있다. (최원규,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1988, pp. 256~257).

12) 『日本書紀』에 따르면 일본의 제1대 천황인 신무천황이 야마토(大和)에 도읍을 정하면서 “六合을 겸하여 都를 開하고 八紘을 併하여 宇로 한다”(6대양 8대주를 병합하여 한 집으로 한다는 뜻임)는 내용의 조칙을 내렸는데, 여기서 생겨난 말이 ‘八紘一爲’인 것이다. 1940년 8월 제2차 고노에 내각이 기본국책 요강에서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 “황국의 국시는 팔굉을 일우로 하는 건국정신에 근거한다”고 밝혔는데, 이때 ‘팔굉일우’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개마고원, 1999, pp. 214~215).

13)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1999), p. 18.

14) 최원규, 앞의 책. p. 421.

전면전을 선언한 태평양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하나의 이념적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아시아주의¹⁵⁾였다. 1930년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란 결국, ‘국체명정’과 ‘팔굉일우’의 불안한 공존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이념적 가교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연대를 통해 서구의 식민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킨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부담을 스스로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1930년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새로운 아시아질서의 건설’, ‘아시아의 연대와 해방’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서구 식민지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질서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를 ‘연대’, ‘협동’, ‘공영’의 관계로 설정하여 중국과의 전면전이 갖는 국가적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고, 나아가 일본과 서구사이의 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야군을 만들고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東亞新秩序¹⁶⁾, 大東亞共榮圈¹⁷⁾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선전된

15) 1992년에 발간된 『일본국사대사전(日本國史大事典)』에서는 아시아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주장. 범아시아주의 등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메이지 초기의 민권론과 국권론, 歐化主義와 國粹主義의 대립은 일본 팽창주의가 만들어낸 것이고, 이 풍조 속에서 아시아주의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던 아시아주의도 자유민권의 쇠퇴, 국가기구의 정비, 淸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비확장 과정에서 점차 아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수렴되어갔다. (중략) 그리고 그 후 아시아주의는 천황주의와 함께 많은 우익단체에 맡겨져 후에는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 사상과 결부되어가게 된다.”

한편 『아시아역사사전』(平凡社, 1960)의 「대아시아주의라」는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아시아 제민족은 일본을 盟主로 해서 단결하라” 결국 이러한 주장이 일본제국주의의 粉飾논리로 전락했다는 내용이다.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3, p. 27, 재인용).

16) 박성진(앞의 책, p. 294)의 경우를 토대로 일본이 제창한 동아신질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일 전쟁 이후 태평양전쟁과 함께 ‘大東亞共榮圈’이 공식적으로 내세워지기 전까지 綠旗聯盟에서는 주로 ‘東亞協同體’, ‘동아블럭’ 등의 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대륙침략론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녹기연맹에서는 1930년대 특히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외팽창의 목표를 ‘일본적 질서의 세계재편성’이라는 말로 대변하며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일본적 질서의 세계재편성’의 전단계로 ‘동아블럭’ 또는 ‘동아협동체’를 상정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동아블럭이란 ‘일

1930년대의 아시아주의는 결정적인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의 존재였다. 서구 식민지로부터 아시아의 해방을 주장하는 일본 자신이 식민지를 보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 계속되는 전쟁 상황에서 조선과 대만을 독립시킬 수는 더욱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어 서구와의 전면전을 감행하면서 일본에게 더욱 절실했던 것이 안정적으로 전쟁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병참기지’의 존재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식민지 조선과 대만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어떤 내부적인 반란이나 저항도 없으면서 동시에 일본의 전쟁에 동참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줄 수 있는 ‘일본국민’, ‘일본군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지 적군이 될 수 있는 단순한 이념적 동지는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수행상의 필요성이라는 현실과 일본의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아시아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실제로는 식민지이면서 형식상으로는 식민지가 아닌, ‘일본 아닌 일본’을 만드는 일이었다. 즉, 식민지를 内地化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병참기지를 확보해야만 했다.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해 식민지에 대한 同化政策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동화정책으로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지역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자기모순과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직후부터 줄곧 조선인의 완전한 일본인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3·1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천황의 적자’로 전혀 차별하지 않고 ‘一時同仁’¹⁸⁾의 입장에서 통치하겠다는 要旨의 勅書 발표로 이어졌고,

본을 선각자로 하고 실력의 중심으로 삼아서 일본이 중추에 위치하고 만주국, 몽고, 新興支那가 좌우에 배치된 모양’을 뜻하였다.

17)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40년 8월 1일 제2차 고노에(近衛文相) 내각의 외상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의 발언이라고 한다. 마쓰오카는 “황도의 대정신에 따라 먼저 일본·만주·중국을 그 일환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을 통하여 “공정한 세계평화의 수립에 공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은 1930년대후반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되면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위한 계층적인 질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논리와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는 김정현,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체』, 『역사비평』 가을호(1994), pp. 71~79를 참조.

이어 1920년 하라다카시(原敬)수상이 ‘朝鮮統治問題 私見’발표를 통해 조선에서의 식민통치 원칙으로 동화주의 즉, 內地延長主義를 내세우면서 공식화되었다. 이후, 조선에서의 동화주의 원칙을 ‘內鮮融和’¹⁹⁾로 내세우고 통치에 임했던 우가키(宇垣一成)조선총독의 施政方針은 1937년 중·일 전쟁을 계기로 ‘內鮮一體論’²⁰⁾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 1930~40년대 일본의 조선지배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공산주의운동, 농민운동 등을 억제하면서도 자신들의 아군으로서 조선인들을 전시체제에 협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15년 동안의 戰時상황과 35년에 이르는 일본의 強占이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저항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군대와 경찰, 사법 기관 등의 억압적 국가 기구가 크게 작

18) 日鮮이 이미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형제자매의 의를 도모해야 함을 전제하고 그 마음이 같고, 사업이 동일하고, 학식이 동일하면, 모든 일이 자연히 동일하여 동일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毎日申報』(「論說: 親密의關係」, 1910年 9月 11日)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至今形편으로觀하면日本이即朝鮮이朝鮮이即日本이라彼我의分이無호즉奚恃日本人만領土가廣大하고姉妹兄弟가增加호를喜悅호뿐 아니라朝鮮人도領土가益大호고兄弟姉妹가增加호를喜悅호者이로다向日에는但히隣邦의詛를守호였거니와今日에至호야는特別호親密關係가有호였스니其情이尤近호고其詛가尤深호야一家中에親兄親弟와無異호즉其痛을相問호고其癢相括호야肢體를作호고心腹을許호야一毛라도疑惑호는情이無호야智識을相換호고業務를相勸호고有無를相資호야財産도可保호고生命도可全호야國利民福이無限히增進호리로다”

19) 우가키(宇垣一成)조선총독은 내지인과 조선인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은 그의 일기 중 융화론에 대한 부분이다.

“일본의 조선에서의 통치와 조선의 민심은 한 그릇에 담겨있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가까워 泥和融合이 안 되는 느낌이 있다. 이 관계가 교정되지 않고는 일본과 조선 융합의 진정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기름을 환원정제하여 물과 섞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宇垣一成 日記』, 1927년 10월 3일, p. 611). 위의 인용문은 최유리, 「日帝 末期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1995), p. 10 참조.

20)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전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선의 지배를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재편을 위해 미나미(南次郎)조선총독은 최고의 통치목표로서 ‘내선일체’를 제창하였다. 그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역원총회 석상에서 ‘내선일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로 손을 잡는다거나 융합한다거나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손을 잡은자는 손을 놓으면 다시 따로따로가 된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섞으면 융합하는 모양이 되기는 하지만 그 래서는 안된다.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한다.”

위의 글은 미야다 세즈코(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일조각, 1997), pp. 164~165 참조.

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 체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기반은 교육 기관, 대중 매체, 종교 등의 식민지 사회 전반에 걸쳐 유포된 식민지 지배 담론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강점 초기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담론들을 창출하고 유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인을 더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협력의 자발성을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수행의 주도자였던 일본이 조선인을 ‘자율적으로 행위 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조선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조선인들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²¹⁾

아래부터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 확대일로를 치달았던 일제말기 대외적 전쟁명분의 저류로서 작용했던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확대되었고 강화되어 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그 대상을 조선에 한정하여 봄으로써 당시 식민담론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21) 미야다 세즈코의 경우 일제의 이데올로기 작업의 목적이 단순한 ‘일본인화’가 아니라 ‘황민화’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천황의 신민’으로, 전쟁에서 어떠한 사심도 없이 천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을 의도했다고 서술했다. 결국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일본의 식민정책은 일방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같은책, pp. 97~98).

2. 戰時下 식민담론의 확대·강화와 그 의도

1) 침략의 합리화와 아시아주의

근대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본이 ‘동양’ 내지 ‘동아’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는지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이를 통해서 ‘동양’ 내지 ‘동아’라는 지역세계가 근대 일본의 국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磁場이 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일본의 불완전한 아이덴티티를 구성해 가는 기제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사적·경제적인 이유로 아시아로 진출할 때에도 자신들의 의도를 숨긴 채, 아시아의 평화 확보 또는 서구의 식민지적 침략에 대한 저항과 아시아인의 해방이라는 논리로 정당화시켜 나갔다. 대외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논거를 제공했던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외교적 실패와 치욕을 가리는 자위적 기능과 함께 자신들의 목적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同文同祖, 同文同種, 亞細亞連帶論, 日本盟主論, 三和主義, 東洋平和論, 新아시아주의, 大아시아주의, 東亞聯盟論, 東亞新秩序論, 東亞協同體論 등 다양한 하위 담론들로 표면화되면서, 일제말기에는 대동아공영주의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 시기의 정치·경제·사회·사상 등 제반 맥락과 연동하며 변화를 거듭했던 아시아주의는 ‘연대’와 ‘평등’이라는 담론의 표층과는 달리 그 심층에는 ‘침략’²²⁾과 ‘차별’을 내포하면서 근본적으로 모순²³⁾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아시아주의에 근거하여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만주를 침탈하였으며, 중·일 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동아공영권

22) 신채호는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1909)이라는 글을 통해 아시아주의를 일본의 조선침략 및 동양 침략을 은폐하고 호도(糊塗)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영서·최원식,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pp. 216~220).

23) 김경일·강창일의 논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래 일본의 아시아주의적인 발상과 사고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전개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표면적으로 아시아를 하나의 정치나 문명의 단위로 설정한다는 논리를 설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침략의 정당화 내지 합리화의 연설이었고 이론적 은폐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2000), pp. 269~332 참조.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것이 근대국가로 뒤늦게 출발한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을 수용하여 유럽의 위치에 제국 일본을, 동양의 위치에 아시아를 배치시키고 스스로를 주체의 입장에 세웠다. 물론 서양의 동양학이 서양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양연구이었던 만큼 일본의 아시아주의 역시 일본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없다. 결국 일본이 서양에 맞서는 ‘近代超克’²⁴⁾을 명분으로 일본식 아시아주의를 제창한 것은,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역사적으로 객체화하는 작업이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아시아주의 이론의 핵심은 익히 알려진 대로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이 단결하여 서구의 동양 침략에 맞서 대동아공영권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양 고대사는 일본을 중심으로 과감히 재구성되었고 일본정신은 절대자인 천황을 기점으로 재창조되었다.

일본이 창출한 대동아공영권은 서구로부터 해방된 공간이었으며, 따라서 대동아공영권건설을 위한 제국 일본의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이른바 ‘聖戰’으로 합리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인종적 공포’와 ‘인종적 사명’에 대한 어휘들로 가려졌고 ‘운명공동체’, 대동아 가족과 같은 담론의 차원에서 폭넓게 다뤄지면서 정당화되어 갔다. 이에 따라 서양과 동양은 상호배타적인 이분법적 정의를 통해 정형화되었다. 여기서 동양적인 것은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서양은惡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예컨대 서구의 ‘강권 지배와 복종’에 의한 국제 질서가 ‘舊體制’였다면, 대동아공영권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국 일본이 지도하는 ‘新體制’였던 것이다. 아래 최남선과 채만식의 글은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이 세기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하건대 우리는 아세아의 해방이 되리라

24) 근대의 초극은 일본의 문학잡지 『문학계』가 1942년 9·10월호에 실었던 심포지엄을 의미함.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자, 철학자, 문화인 등 13명이 참가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서양적 근대를 ‘악옥(惡玉)’으로, 일본적 정신을 ‘선옥(善玉)’으로 규정, 명치유신 이후 받아들인 서양문명을 거부하고 일본의 고전과 전통으로 회귀하자는 복고주의, 전통주의, 국수주의, 정신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는 『문학계』 동인과 ‘일본낭만파’, ‘교토학파’가 주도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히로마쓰 와타루(廣松渉), 김항 옮김, 『근대초극론 : 일본 근대 사상사에 대한 시각』 (민음사, 2003), pp. 11~31, pp. 180~215 참조.

고 하고 싶다. 아세아는 지구 육지 면적의 3분의 1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과반을 가지고 인류문화의 최고 또 최대 연원을 짓는 자이어늘 명실이 완전한 독립자주국은 일본 하나밖에 없으며, 그 나머지는 3백년 이래로 차차 구미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를 이루어서 그 약한 질곡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되는 소이를 그 도덕성에 둔다고 하면 인류의 대부분이 그 소부분의 압박 대상으로 있는 패륜현상은 진실로 인류 자신의 죄악 또 치욕일 밖에 없다 (중략) 더구나 동양과 서양이 일방은 압제자 착취자요 일방은 피압제자 피착취자라는 비윤리적 대립상을 정하고 있음은 인류 양심이 오히려 미미함을 나타내는 큰 증거이다.²⁵⁾

우리의 신체제는 결코 소비에트러시아처럼 국민의 일부분인 프로레타리아만으로 된 집단체나 그의 기능과는 전혀 달라서 1억의 전국민이 무슨 주의나 이해,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황도적으로 한데 뭉어진 一心國家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그답에 올 기미가 있는 공산주의를 내외로 물리치고 皇道日本の 본연한 국체를 만전하여 빛내기 위한 소화유신의 방향이 있었던 것이다.²⁶⁾

위에 인용한 최남선의 글에는 서구의 “패륜” 대 동양의 “양심”이라는 대립적 사고와, 인류의 “죄악” 및 “치욕”에 근거한 현실인식 등 도덕적 · 관념적 언급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채만식의 글은 대동아질서의 저층에 일본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체제 아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제 욕심을 채우는 이기주의이자 구체제의 이념이 되었으며, 이것을 신봉하던 종래의 미 · 영의 질서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질서, 침략적인 질서가 되었다.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이 ‘白禍’에 대항하고 구질서를 타파하는 아시아 공존공영의 질서이자 생존권의 질서로 자리매김 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아시아 평화 수호의 성전으로 합리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구현한다는 미명아래 일본이 아시아에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에서는 중국, 대동아에서는 미국이

25) 최남선, 「亞細亞의 解放」, 『每日新報』, 1944년 1월 1일.

26) 채만식, 「文學과 全體主義」, 『三千里』, 1941년 1월號, p. 250. (박수현,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 지식인의 체제협력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2006), p. 191, 재인용).

라는 장벽을 넘어야만 가능했다. 이런 맥락에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태평양전쟁까지 도발한 일본의 전쟁은 아시아에서의 지배권 확립을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전쟁수행을 위한 戰時動員體制의 형성과 이를 정당화시킬 명분이 필요했다. 그럼 당시 일본은 전시동원을 어떻게 정당화 시켜갔을까.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한 논의로 일본제국주의의 대륙병참기지였던 식민지 조선에서 요구되었던 ‘인간상’과 戰時下 통제·동원 조직의 결성을 통해서 일제말기의 식민담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시동원의 정당화와 ‘鍊成’의 강제

일본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명목아래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개발·동원·배치 등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그 지배를 받은 조선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전쟁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국가총력전체제도 급격히 강화되어갔다. 조선총독부는 중·일 전쟁 발발 직후부터 조선인에게 국가총력전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미나미(南次郎) 조선총독은 □□國民精神作興運動과 半島民衆의 時局認識□□이라는 라디오 방송연설(1937. 11. 13)일에서 ‘국가총력전과 국민의 각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대의 싸움은 砲火가 서로 마주보는 것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國力과 國力の 싸움이고, 戰場의 第一線에 있는 將兵만의 싸움이 아니며 國家總動員을 가지고 하는 싸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산업이든, 교육이든 하나같이 승패에 관계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國民皆兵의 정신은 오직 총검을 손에 쥔 군인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銃後の 국민도 역시 第一線의 장병과 같이辛苦하고 刻苦한다는 각오로써, 그 생업에 精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²⁷⁾

미나미 총독은 일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정치·경제·산업·

27)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編, 『朝鮮總督諭告・訓示 集成 5』(綠蔭書房, 2001), pp. 69~70.

교육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총력전이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국민도 전방에서 싸우는 장병과 같이 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 생업에 “각고정려”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조선인은 전시체제에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혈연·역사·문화·능력 등이 너무 다른데다가,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전시체제에 적합한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고, 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미나미 총독은 중·일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린 도지사회의 訓示에서 조선통치의 목표로 ‘반도의 일본화’ 즉 ‘내선일체의 구현’에 있다고 천명하고,²⁸⁾ 그 방법으로서 육군특별지원병령과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했다.

그는 이에 즈음하여 발표한 諭告에서,

조선통치의 목표는 이 지역 同胞로 하여금 정말로 황국신민으로서의 本質에 투철하고, 내선일체와 함께 治平의 기쁨에 의지하여 東亞의 일에 대처하는 데 있다. (중략) 新東亞 건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帝國의 重責은 더욱 더 國民資質의 醇化向上을 필수의 時務로서 계속해야 한다. 즉 이 國勢에 따르고 이 世運에 응하는 길은 國體明徴,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3대 교육방침을 끝까지 貫徹하여 大國民다운 志操 信念의 鍊成을 基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⁹⁾

라고 역설했다. 미나미 총독은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것이 통치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체명징·내선일체·인고단련의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조선인의 국민적 자질을 연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미나미 총독이 조선통치의 목표로 내세운 내선일체라는 어의는 원래 조선인과 일본인이 形도 心도 血도 肉도 一體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융합하여 중간형의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일방적으로 일본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

28) 같은책, p. 28.

29) 같은책, p. 5.

이 된다는 것은 減私奉公하는 천황의 백성 즉 ‘황국신민’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내선일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戰時下, 일본이 원하는 인간상이었고, 이러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연성이었다. 미나미 이후 부임한 고이소(小磯國昭) 총독은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임 총독보다도 ‘황국신민의 연성’을 훨씬 더 중시했는데 이러한 그의 인식은 시무식 훈사에서 도 잘 나타난다.

皇國臣民으로서의 鍊成 없는 徵兵制, 國體의 본의에 투철하지 못한 義務教育制 같은 것은 魂 없는 骸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국가총력전인 근래 전쟁의 특징으로서, 思想戰, 經濟戰은 今後 더욱 치열을 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志操를 지키는 것을 굳건히 하고 필승의 신념을 움켜쥐어 털끝만큼도 적이 넘볼 것 같은 정신적 間隙을 없게 하고, 금년 불행하게 일어난 旱水害로 인한 식량 부족을 비롯하여, 大米英決戰 완승을 위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물자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정신·육체 양면의 勞務를 강화하여 다음에 말하는 生産戰力의 증강을 급속히 敢行 充實하기 위해서도, 皇國臣民 鍊成의 즉시 철저와 이에 따른 국민 모두의 純乎한 臣道의 실천이 절대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³⁰⁾

고이소 총독은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徵兵制와 의무교육제의 실시조차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황국신민의 연성을 통한 신도의 실천이 미·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³¹⁾ 총독부는 이런 총독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운동뿐만 아니라 신문·

30) 같은 책, pp. 181~182.

31) 徵兵과 관련하여 鍊成을 설명한 다음의 논설에서 그 일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鍊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國體精神의 明徵, 日本精神의 體得에 있습니다. 우리가 大東亞戰完遂을 위하여, 國家總力을 集中하여 싸우고 있는 오늘날, 國民이 가져야 할것은 오직 完全한 日本人的 自覺과 그를 體得키 위한 修養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것이 그 어느자리이건, 모두다 훌륭한 鍊成의 道場이 되는 것입니다. 工場도, 商店도, 會社도, 그리고 거리에서도 鍊成의 정신이 가득 차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이 朝鮮 家庭에 있어서는 새로운 家庭觀이, 皇國臣民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家庭을 이룩하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이런것을 實際로 몸에 지닐수 있다면, 國債의 不消化買占, 徒食輩等 부끄러운 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밝은 道義朝鮮이 確立될것이고, 聖戰完勝의 날이기도 할것입니다.” (牧山春植, 「徵兵과 鍊成」, 『朝光』 1943年 4月號, p. 54).

잡지·방송 등을 통해 연성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조선인이 주요 구독자였던 『朝光』의 특집기사는 皇道精神·肇國精神·國體本義와 연성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皇道精神이란 肇國以來의 國體精神으로서 박으로는 八紘一字의 정신이요 안으로는 君民一體의精神이다. 八紘一字란 簡單히말하면 全世界의 一家主義로서, 天下의 各國을 각각 그處할바를 얻게하여 共存共榮을 圖謀하는것이니 이點에있어 西洋類의 弱肉強食의 思想과는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다. 只今 帝國의聖戰은 實로 이 八紘一字의 大精神으로써 東亞諸民族을 解放하여써 各各 그處할 바를 얻게하는 것이다. 다음에 君民一體라는말은 무엇을 意味하는것인가 이것은 皇室과 國民이 一體임을 말하는것이니 君民의 關係는 곧 어버이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 帝國의 最高原理는 實로 이獨特한君民關係에 있는바로 歐米類의 權利義務關係와는 또한 根本的으로 다른것이다. 이것이 곧 帝國의肇國精神이요 國體의本義인 것이다. 簡單히 말하면 鍊成이란 國民에게 이國體本義를 徹底시키자는것으로서 이鍊成으로 말미아마 첫째로 大東亞戰爭의 聖戰인所以를 徹底히 깨달을것이요, 둘째로는 이聖戰의必勝을 其함에는 滅私奉公의 一念에 불타 오직 赤子인本分을 發揮하는것이 臣民된本分임을 더욱 切實히 느낄것이다.³²⁾

조선총독부는 연성의 실행을 위해 鍊成課와 皇國修鍊院, 國民總力朝鮮聯盟에는 鍊成部를 설치했다. 그러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젖은 일본인에게 연성이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지만,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희박한 조선인에게 연성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연성에 대한 선전과 강제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부정하기를 강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에 대한 연성은 강력하고 혹독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체제에 순응한 인간상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이 전일적으로 추진한 연성은 법령·제도·운동 등의 모든 통치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논지의 흐름상 여기서는 전국에서 일제히 거행된 연성일 행사에 초점을

32) 卷頭言「鍊成의 봄」, 『朝光』 1943年 3月號, p. 15.

맞추어 연성운동의 전개과정만을 개관하고자 한다.³³⁾

조선총독부는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朝鮮中央情報委員會³⁴⁾를 만들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愛國日 행사를 거행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에도 없던 애국일 행사는 학교가 먼저 1937년 9월부터 매월 6일에 실시하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공서·회사·은행·공장·각종 단체와 町洞會·部落으로 확산되어, 매월 1일 또는 15일에 거행했다. 그 목적은 혹독한 정신훈련을 통해서 황민화를 자연스레 체화시키는데 있었다. 애국일행사의 근본 취지는 조선인에게 일본의 신도·천황·국가에 대한 경외심과 충성심, 즉 황국신민의 도를 체득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애국일행사와 더불어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의 서사와 황국신민체조를 만들어 홍보하였으며 여기에 일본의 興亞奉公日 제정에 호응하여 2년여 동안 실시해온 애국일을 폐지하고 1939년 9월부터는 매월 1일에 홍아봉공일 행사를 거행했다. 神道實踐과 職域奉公을 생활화함으로써 고도국방국가 건설의 이바지에 목적을 두었던 이 행사는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이 국민총력운동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개최되었다. 이후 미·일 개전에 즈음하여 천황이 결전의지를 다지는 조서를 반포하자, 국민총력 조선연맹(이하 ‘총력연맹’)은 1942년 1월부터 매월 8일을 大詔奉戴日로 정했다. 그리고 그전까지 개최해 온 홍아봉공일을 이것으로 대체하고 매월 7일 저녁에 열던 애국반상회도 매월 10일 저녁으로 옮겨 개최했다.³⁵⁾ 총독부는 천황이 급박해지자 종래의 대조봉대일을 1943년 3월 1일부터 鍊成日로 바꾸고, 매주 월요일마다 그 행사를 거행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동종의 연성일 행사가 이름만 달랐을 뿐 점점 확대·강화되어 갔다.³⁶⁾ 결국,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이 필요로 했던 인간

33) 이에 대한 내용은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통제: 경성부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24권(2004), pp. 850~858 참조.

3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순애, 「朝鮮總督府의 情報宣傳政策」, 『한중인문학연구9』 (2002), pp. 163~192 참조.

35) 이종민, 앞의 논문, p. 863.

36) 전상숙의 논문, 「일제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東方學志』 124집(2004), p. 641을 참고해 보아도 당시 연성행사의 종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일본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이 양양되지 않았던 것에 유감을 품고 경신순조, 보은감사운동, 청소운동, 조기운동, 시간려행운동, 어두도의운동 등 종래와는 다른 ‘清新運動’을 개발하여 매월 ‘철저실천사항’으로서 실천하도록 강제하였다.”

상은 동원에 부응하는 충실한 황국신민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황국신민을 위한 연성은 조선인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게 되었다.

3) 통제와 동원 조직의 결성

일본은 ‘아시아 연대와 해방’이라는 아시아주의와 이것의 하위담론들을 내세워 침략주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아울러 전시동원을 위한 식민지적 착취를 내선일체로 은폐하려 했다. 황국신민의 연성도 이것의 일환으로서 실시됐던 것이다. 하지만 희생을 강요하는 전쟁동원에 있어서 식민지 조선의 입장은 일본의 입장과는 달랐다. 조선인이 일본의 침략전쟁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지만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피해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전쟁협력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견해³⁷⁾가 그것이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당시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었던 다종다양한 ‘유언비어’를 통해 식민지 민중이 갖고 있었던 전쟁관의 일단을 살펴본 연구³⁸⁾가 그렇다.

이것은 곧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동원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조선인 전체를 물리적 강제로 통제망에 편입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강경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은 ‘단체의 조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1938년에 만들어진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이하 ‘정동연맹’)과 이것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발전하여 1940년에 만들어진 ‘총력연맹’은 통제망의 큰 골자를 확립하면서도 이후의 전시동원과 관련한 여러 단체의 조직을 알리는 첫 출발이었다. 총독부와 그 휘하의 행정조직들이 꾸준히 식민통

37) 변은진, 「日帝 戰時과시증期(1937-45) 朝鮮民衆의 現實認識과 抵抗」, 고려대 사학과 博士學位論文(1998).

38) 미야다 세즈코(宮田節子), 앞의 책.

치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전시라는 특수상황에서 조선인들의 내재된 불만을 희석시키고, 민족의식이 광범위하게 표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³⁹⁾ 또 나아가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전개한 지배담론과 연성만으로는 전시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고 인식했고, 이것의 기저에는 조선인의 민족성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안감⁴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병합 이후 추진해 온 황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인들의 의식에 신뢰를 보내지 못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이것은 일본이 단체의 조직이란 방법을 통해서 전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이러한 조직화는 먼저 문인들을 대상으로 시도되어 1937년 5월 2일, 朝鮮文藝會가 조직되었다. 同 단체는 총독부 학무국의 중용으로 김영환, 최남선, 이광수와 경성제국대학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문인, 음악가, 학자 등 30여명을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중·일 전쟁의 발발로 일본은 통제의 큰 골격으로 ‘정동연맹’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종파 횡으로 조선인들을 엮어나갔다. 이러한 흐름은 1938년 7월 24일, 좌·우익의 전향자들로 구성된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이하 ‘사상보국연맹’)을 결성시켰으며, 1939년 10월 29일에는 250여명의 문인들로 구성된 朝鮮文人協會로 이어졌다. 또한 1941년 8월,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된 김동환 중심의 臨戰對策協議會와 윤치호 중심의 興亞報國團도 ‘정동연맹’을 중심으로 나름의 활동을 펼쳤다.

이후 이러한 흐름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에 의해 다시 한번 재

39) 한궁희, 「국민정신청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민족문제연구』 10권(1996), p. 38.

40) 이러한 모습들은 전시체제기 징병제 시행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물들을 통해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징병제 시행과 관련한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방기중, 『일제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2004.

미야다 세즈코(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이중연, 『‘황국신민’의 시대』, 해안, 2003.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최유리, 「일제 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外大史學』 (2000).

홍종필, 「日帝時代 朝鮮에 있어서 志願兵制度의 展開와 그 意義에 대하여」, 『명지사학』 (1997).

편되게 되었다. 통제망의 축인 ‘정동연맹’이 ‘총력연맹’으로 더욱 강화되자 여타의 단체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우선 전향자 단체였던 ‘사상보국연맹’이 1940년 12월 28일, 연맹조직이 아닌 재단법인 형태의 大和塾으로 전환되었고 임전대책협의회와 흥아보국단은 1941년 10월 22일 朝鮮臨戰報國團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1943년 4월 17일에는 조선문인협회가 해산되어 朝鮮文人報國會로 조직되었다. ‘유형적 동원’을 강화해 나가긴 했지만 겉으로는 ‘정신동원’을 강조했던 ‘정동연맹’이 ‘물적 동원’을 공언⁴¹⁾하며 출발한 ‘총력연맹’으로 바뀌면서 이하 재편된 각 단체들의 성격도 이에 맞게 특징지어졌다. ‘물자 동원’이라는 것이 물리적 행정력에 기초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력연맹’이 □□정동연맹□□보다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총력연맹’의 총제와 부총제를 총독과 정무총감이 담당⁴²⁾하여 통제선을 일원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무국은 총무·지방·식산·농림·저축·보도·사상·훈련·선전의 9부로 나누어 총무·선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독부 각 국장이 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총무부는 전 도지사 정교원이 맡고, 선전부는 경성일보 사장 미타라이(御手洗辰雄)가 맡음으로써 사실상 총독부 관리가 연맹 사무국을 장악한 셈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의 전환은 구축된 통제망을 행정조직과 일치⁴³⁾시켜 노골적으로 동원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시하 식민지 조선에서는 수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었다.⁴⁴⁾ 식민지 안에서 특정시기를 기점으로 집중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배자의 의도가 강하게 표출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이중연, 『‘황국신민’의 시대』 (해안, 2003), p. 107.

42)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p. 76.

43) 한궁희, 앞의 논문, p. 40.

44) 여기서 밝힌 단체들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었지만 논지의 흐름 상 기타 여러 단체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못했다. 특히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 안식교, 성공회, 구세군, 조선기독교서회, 등의 기독교 단체와, 유도연합회, 천도교, 불교 총본산, 대동일진회, 동학원의 각 종단과 이를 연합한 종교단체 총궐기운동연합회 등과 같은 단체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상보국연맹’과 제휴했던 조선방공협회와 박춘금이 당수였던 대의당의 자매단체였던 대화동맹, 그리고 최린을 회장으로 했던 조선언론보국회 등의 단체들도 논지에서 제외하였다. 단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서 그들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군사적 팽창을 감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침략과 전쟁동원을 정당화하려 한 여러 식민담론들이 제창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식민담론의 중심에 상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 아시아주의가 있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아시아주의의 모습을 통해 일본이 어떻게 식민담론들을 생성하고 재배치해 갔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담론들의 배경과 의도만을 고찰해 보았을 뿐 그것이 수용되어 표출되어 가는 양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여기서는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은 민족운동에 종사하다가 3·1운동 이후 변절하거나 또는 ‘실력양성론’을 기반으로 ‘개량적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의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변절한 자들⁴⁵⁾도 있었다.

민족주의 진영의 민족운동의 성격 여부를 떠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식민지 조선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위치이다. 곧, 재산·종교·교육·문화 등 어떤 분야에서건 기반을 축적하여 조선인 사회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략전쟁을 치르며 조선인의 ‘무한동원’을 노리는 일본에게 이들은 식민담론이 침투되어야 할 제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담론의 내면화과정은 당시 친일의 길을 걸었던 조선 지식인들의 굴절된 자의식과 친일담론의 생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pp. 152~153.

Ⅲ. 조선지식층의 식민담론 수용과 내면화

1. 차별에서의 탈출과 내재된 열등감의 표출

일본은 확대되어 가는 침략전쟁으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시동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구축 대상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은 ‘조선’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는 완전히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의 완전 동화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은 일본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 지배정책의 변화를 꾀하였고 여기서 등장하게 된 것이 내선일체의 논리였다. 내선일체는 조선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가 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추상적인 강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원병제도의 실시, 교육제도의 개선 등 실천적인 운동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강조는 자연히 기존의 민족운동을 표방하던 조선지식인에 대한 탄압과 감시, 전향의 강요로 이어졌다. 특히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사상통제를 위한 각종 법률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체제나 전쟁에 비판적인 지식인은 물론 조금이라도 민족적 성향을 띤 지식인은 모두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중·일 전쟁 이전 음성적으로 전개되었던 일본의 사상통제와 약체화 공작이 이제는 내선일체의 명분 아래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전개되었음⁴⁶⁾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의든 타의든 체제에 협력·순응하거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이 중 상당수는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섰다.

당시 상당수 지식인들이 친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내선일체가 크게 작용한데 있다. 이는 지식인들 대부분이 내선일체를 ‘차별로부터의 탈출논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내의 민족해방운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

46) 임종국,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pp. 165~166.

진 상황 속에서 내선일체는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 이광수가 “조선사람의 희망을 단적으로 말하면 조선사람이 내지인과 전혀 차이 없는 황민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 조선사람은 신뢰받고 싶습니다. 경계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민으로서 대우받고 싶습니다.”⁴⁷⁾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내선일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타협적·개량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의 한계는 이미 기존의 연구⁴⁸⁾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들 지식인은 만주사변과 중·일 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의 힘에 압도되어 독립보다는 일본에 편승하는 것이 조선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 내세웠던 내선일체는 이들에게 그동안 극복하기 힘들었던 민족차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⁴⁹⁾

이렇게 굴절된 지식인의 내면세계에는 그들의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최우선으로 작용하는 식민지 사회에 의해서 억눌려야 했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민족 차별의 부당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던 피해자로서의 자의식은 동화의 내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던져졌던 ‘내선의 무차별 평등’⁵⁰⁾이라는 미끼를 그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후 이것은 “언제가는 조선인은 완전하게 일본민족이 되는 운명에 있다. 그것은 우리 조선인의 나아가야 할 길이다”⁵¹⁾라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차별의 논리에서 도피하고 싶었고 또 그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이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은 꼭 차별받지 않는, 内地人と 동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당시 조선 지

47) 이광수, 「阿部新總督に期待する」, 『國民總力』, 1944年 8月 15日號, p. 14. (미야다 세즈코, 앞의 책, p. 173, 재인용).

4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찬승,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 자치운동과 자치운동론」, 『한국 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pp. 306~365 참조.

49) “조선인의 고유한 것을 고집하는 한 민족차별은 엄연히 존재하므로, 완전한 일본인이 됨으로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던 현영섭의 발언에서도 이것의 일단을 가늠할 수 있다. (조동구, 「친일문학연구: 친일문학논리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부산공업대학교 논문집』 제36집 (1994), p. 49).

50)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役員總會席上總督挨拶」, 1939年 5月 30日. (미야다 세즈코, 앞의 책, p. 165, 재인용).

51) 현영섭,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 1938年 1月號, p. 29. (최원규, 앞의 책, pp. 354~355, 재인용).

식인들의 능력은 내지인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절규와 욕망은 더욱 처절했던 것이다.

대학을 나온 뒤(1931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영문과 졸업:인용자)에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는 늘 우수한 성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리이드했었지만, 졸업장을 받는 순간에 저울대는 단연코 기울어져 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은 하늘로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다. 여기서 다른 학생들이란 일본인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제 일본인들은 물러갔지만 위에서 말한 바 가치의 전도의 현상은 여전히 졸업생들을 기다리는 현상일 것이다.⁵²⁾

최재서의 경우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시 지식인들의 내면을 읽는데 나름의 참고는 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을 통해 보면 당시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못 견뎠으며, 왜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면 차별로부터 도피하고자하는 의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차별받는다는 의식은 비교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준거집단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간은 우열을 느낀다.⁵³⁾ 따라서 최재서의 경우도 그 자신의 준거집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며 대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차별로부터 벗어나야만 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최재서는 조선인의 한사람으로서 싫건 좋건 조선민족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그는 상류계급에 속하고 지적수준에서 보더라도 최상급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는 경성제대 文科에 수석으로 입학했고⁵⁴⁾, 영어 잘하기로 유명했으며, 졸업한 뒤에는 同 대학에서 강사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조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일본 영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영문학연구』에 자주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고, 일본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사상』, 『개조』, 기타의 잡지에 빈번히 기고

52) 최재서, 「價値의 世界와 行動의 世界」, 『印象과 思索』(연세대출판부, 1977), p. 102.

53) 차별에 대한 인식과 그 반응에 대해서는 Lenski가 제시한 '지위불일치'의 개념을 참고, 이에 대한 설명은 양춘, 『한국사회 계층구조와 동학』(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pp. 198~213 참조.

54) 이충우, 『京城帝國大學』(다락원, 1980). p. 118.

하였다.

여하튼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성계의 일이고 정치권력이 최우선으로 작용하는 식민지 사회에서는 그가 아무리 일본인 이상의 능력을 가졌고, 일본인의 흉내를 내 일본인을 자처하더라도 역시 현실적으로는 차별을 면하기 어려운 조선인이며, 일본인 사회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주변인이었다.⁵⁵⁾ 다른 지식인들의 경우도 최재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내면에 쌓인 식민지인으로서의 피해의식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상처받은 자의식에 몰입한 나머지 일본이 미끼로 던진 내선일체의 이중구조⁵⁶⁾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한계는 차별문제를 식민주의나 정책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조선인들의 문제로 돌리게 만들었다.⁵⁷⁾

조선병합이 그러하였듯이 소위 내선일체는 마치 일본제국주의가 조선민족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는 시혜의식과 일본민족은 조선인이 동화되어야 할 우수한 민족이라는 우월감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⁵⁸⁾ 내선일체의 궁극적 모습이 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 內鮮人 사이에 일체의

55) 최재서를 비롯한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朝鮮’이라는 민족적인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실제로 최재서와 유진오 경우 교수의 물망에는 올랐지만 결국에는 교수가 되지 못했다. (석진, 「일제말 친일문학의 논리 연구」, 홍익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2004, p. 28 참조).

56) 이와 같은 내선일체의 이중구조는 최유리(「日帝 末期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대 博士學位論文, 1995, p. 17)의 논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일제가 표방하는 내선일체의 내용은 황국신민화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체화이며, 각종 차별제도도 ‘특수한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황민화의 진도에 따라 改變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단계에서는 아직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일제 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황국신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얼마든지 유예될 수 있는 일체화, 즉 차별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57) 장용경, 「일제 植民地期 印貞植의 轉向論」, 『韓國史論』 49권(2003), p. 239.

58) 『每日申報』의 필진들의 경우 병합 후 조선의 변화를 조선총독의 선정으로 표방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문명한 법률 하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게 된 것을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조선인은 지식과 산업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부력이 내지인과 동일하게 될 자격과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동화정책에는 사회진화론이 이용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식민지조선인 또는 조선문화의 열등성과 일본인 또는 일본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동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제창되었던 내선일체의 경우도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내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진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상』 (도서출판 선인, 2003, pp. 226~227, pp. 240~244)의 제7장 매일신보의 일선동화론, 3절 후반기의 내선일체론을 참조.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 근본이며 또한 중국의 목적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국체의 명칭을 무기로 하는 황민화의 순환논리를 반복하여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간계를 보였다. 더구나 내선일체의 내부에는 조선인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난관인 ‘국체의 명칭’을 설정하여 조선인의 미숙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행해졌다.⁵⁹⁾ 결국 그 미숙성을 지적하는 권한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있어 일본인의 차별과 억압의 이중구조를 갖는 내선일체의 굴레는 언제까지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본질을 조선의 지식인들은 직시하지 못한 채 일본이 제시한대로 식민지라는 현실적 상황을 이상화했다. 이로 인해, 언제나 부족한 것은 자기 및 자민족이 되었고, 이것은 부족함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내지인측에서 조선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는 것을 책하거니와 그것은 차라리 자연스런 일이 아닌가. 그야 개인으로 보면 혹 어떤 일개 조선인이 어떤 일개 내지인보다 모든 점에서 우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인이 내지인에 비해서 충성과 문화의 수준이 낮은 내지인의 우월감은 자연스런 일이니 이에 대하여서 조선인은 항상 일보 매진하여 일단으로 더 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내지인은 그 조상적부터 많은 피를 흘려서 皇運에 扶翼하여 오직 앓았는데. 조선인은 금일의 비상시에 있어서 血로나 知로나 財로나 내지인만한 奉公을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조선인이 경과 찬과 감사로 내지인을 대하면 지극히 원만히 갈 것이라고 믿거니와 이와 반대로 불평과 대립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개인의 일이라 하더라도 내선일체의 대목적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⁶⁰⁾

59) 조선인의 미숙성이란 결국 지배자의 입장에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미야다 세즈코의 경우 이것을 ‘황민화의 정도’에 따른 차별의 정당화로 설명하고 있다. 즉, ‘민도의 차이’라는 병합 이래 일관되게 사용된 차별의 논리로 내선일체의 모순을 효과적이고 교묘하게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가 평등을 원하지 않는 이상 조선사람의 ‘황민화 정도’는 완벽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內鮮간의 평등을 내세웠던 일체의 내선일체란 지배와 차별을 교묘하게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야다 세즈코,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 1997, pp. 174~182)의 4장 4절 동화와 차별의 구조를 참조.

60) 이광수, 「心的 新体制와 朝鮮文化의 進路」, 『每日新報』, 1940年 9月 6日.

이 글을 통해 보면 이광수는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선일체와 황민화의 실천을 통해서 식민지라는 시대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이상화했다.⁶¹⁾ 그러나 차별과 억압이 계속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돌아볼 때 내선일체에 대한 이광수의 접근의식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자각될수록 자민족에 대한 자성 촉구와 함께 제국 일본에 다가가는 그의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인 당신이 한 사람의 조선인을 - 학생이라도 좋고, 노동자라도 좋고, 또는 여행자라도 좋다 -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해 준다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국어와 일본정신을 배우고, 당신을 통하여 일본을 사랑하고 모든 일본적인 것을 사랑하여 점차 자기것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폐하를 위해 한 사람의 戰士를 얻는 것이 된다. 아니, 한 사람의 전사가 아니다. 그의 가족과 형제와 자손까지 얻은 것이 된다. 동시에 그에게 최상의 행복을 안겨 준 것이 된다. 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중략)도쿄에서 배우고 있는 조선인 학생들이여. 그대들에게 묻노니, 솔직하게 대답해 다오. 그대 학교의 내지인 학생들이 하고 있는 만큼 그대는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대는 모든 일본적인 것을 그대의 보물로 여겨 피를 흘려 그것을 지킬 만큼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가 혹시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면 그대의 불평은 일리가 있다. 만약 도쿄에 있는 이만의 조선인 학생 전부가 그대와 같이 大君에의 충성심과 일본의 국토와 문화와 국가이상에 대해 애국심을 갖게 된다면 결단코 諸君은 직장을 얻지 못한다든가 차별을 당한다든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

61) 이러한 이광수의 인식은 창씨개명에 임하는 그의 태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지인과의 차별의 제거를 위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또 있는가. 성명 석자를 고치는 것도 그 노력 중의 하나라면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이 아닌가.”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86, p. 285) 더불어 이미 그가 보여줬던 민족의식의 한계를 통해서도 당시의 시대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우중, 「이광수의 계몽의식」,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조연현 著(새문사, 1994, p. 11-94)에서는 이광수의 민족의식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에까지 도달하기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일제가 부여한 체제, 그들이 부여한 문화정책 안에서의 민족의식 또는 민족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것처럼 식민지 백성의 민족적 위치를 부정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민족의식이나 주의는 노란자 없는 달걀처럼 큰 뜻을 잃게 되었다”고 논거 하였다.

아도 좋다. 제군의 선배는 아직 일본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제기관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악한 추측 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⁶²⁾

이렇게 이광수가 자기패배적이고 나아가서 민족패배주의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선인이 완전하게 신민화되지 않은데 있다는 스스로의 납득⁶³⁾과 함께 자신의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로서의 자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광수를 비롯한 다수의 친일 지식인들에게 내선일체가 내지인에게 밀려야만 했던 피해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내재된 열등감을 체질화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62) 이광수, 『內鮮一體隨想錄』, 協和叢書 第5輯, 中央協和會, 1941, p. 10. (정창석, 「『內鮮一體』 論理의 樣相」, 『日本學報』 42집(1999), pp. 377~378, 재인용).

63) 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편] (삼인, 2002), p. 334.

2. ‘민족의 부정’과 ‘국민화 담론⁶⁴⁾’의 형성

내선일체를 통해 노정되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항상 자기와 자민족에 대한 부족함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열등감의 원인이 자신과 조선인의 민족적 결점에 있다는 것으로 곧 조선민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국 민족적 결점의 극복이라는 민족의 부정은 곧 내선일체에 대한 충실 복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39년 김문집은 「朝鮮民族의 發展的 解消論 序說」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朝鮮이 微弱한대로 한번 自立해본다는것은 一時間三十錢씩 貰주는 漢江畔-트 타고 太平洋 건는다는것과 마찬가지로의 空想임은 그야말로 三十錢짜리 뽀-트 노름 밖에 할줄 모르는 幼女蒙童의 常識이다. 自立與否는 옳고 그르고의 問題가 아니다. 애당초의 問題꺼리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보면 이제야 우리에게 남은 唯一의 길이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內地人과 同族이되어서 一切의 義務와 權利를 同一히 享受한다는 皇國臣民에의 길일것이다 (중략) 朝鮮百姓을 救援하는 最後요唯一인 方法은 統治의 絶對權威를 樹立한다는것, 卽搖之不動의 絶對의 中心을樹立하야 二千三百萬을 同一條件下에서 絶對적으로 이에 服從케 한다는 것이다. 이는 過去의歷史가스스로 證明해 주는 見解이다. 朝鮮百姓을 救援하는最後요唯一의 길인 이 方法은 多幸히도-너무나 多幸히도 우리가 皇國臣民이 된다는 이 當然한 行爲로서 스스로 獲得할수가 있는것이다.⁶⁵⁾

김문집의 논리를 통해 볼 때 조선인이 구원은 시급히 조선의 독립불능을 깨닫고 조선이라는 민족성 자체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이 된다. 이것에 미련을 갖는 것은 인용한 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1시간에 30전씩 세주는 한강 뽀-트타고 태평양을 건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공상”이 되는 것

64) 본고는 제국주의 식민담론이 ‘內地’와 ‘朝鮮’을 하나로 묶는 전략의 일환으로 국민개념이 활용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용하여 담론화한 것을 국민화 담론이라 표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시동원을 의무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일본의 의도를 조선의 지식인들은 식민지적 차별에서 벗어날 기회로 이상화했다는 점으로 민족의 문제는 무화(無化)되고 부정되었다는 것이다.

65) 김문집, 「朝鮮民族의 發展的 解消論 序說」, 『朝光』, 1939년 9월號, pp. 256~257.

이며 김문집의 논리대로라면 그러한 공상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다. 이렇게 그의 인식 속에서 조선의 민족성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해물 밖에는 되지 않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황민화의 결정체인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나야만 했다.⁶⁶⁾ 이들을 통해 볼 때 진정한 내선일체는 조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이광수는 내선일체란 “내가 在來의 朝鮮의인 것을 버리고 日本的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一言以蔽文하면 이것이다. 그리하여서 조선 二千三百萬이 모두 戶籍을 떠들어 보기 전에는 內地人인지 朝鮮人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 최후의 理想”이며 따라서 “내선일체가 되고 아니 되는 것은 오직 나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다”⁶⁷⁾라고 하였다.

결국 그들에게는 자민족에 대한 소속감보다도 일본인 지향이 우선이었다. 일본인 지향이란 곧 일본정신에 입각하여 그것을 자각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의 종착지는 일본정신을 호흡하고 생활하는 국민이라는 개념의 도출에 있었다. 식민지 공간에서 조선인을 ‘국민화’의 대상으로 끌어 올린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내선일체 모르지만 ‘국민화의 모델’이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신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새로움을 가장한 동화담론 그 자체였다. ‘국민화 담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선일체가 내포한 모순성을 같이 공유한다는 데 있다. 내선일체의 모순성이 이중구조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다면 ‘국민화 담론’ 또한 제국의 테두리 내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역할 분담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히려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친일의 길로 들어선 자신들의 논리를 ‘국민’이라는 미명 아래 보편적인 가치로 치환시켰다.

‘국민화 담론’ 속에서 일제의 황민화 정책은 더 이상 조선민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되기 위한 과정임과 동시에 의무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일제말기에 시행되었던 황민화 정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볼

66) 김동인의 「반도민중의 황민화」, 김용제의 「민족적 감정의 내적 청산으로」, 박남규의 「내선일체 생활의 인식으로」, 서춘의 「조선과 총력운동」,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 · 「내선일체에 대한 이념」, 이광수의 「황민화와 조선문학」 · 「사변과 조선」, 현영섭의 「내선일체의 세계사적 의의」 · 「내선일체 완성으로 가는 길」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67) 이광수, 「心的 新體制와 朝鮮文化의 進路」, 『每日新報』, 1940年 9月 4日.

수 있다. 징병제 실시의 전제였던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경우, 최린은 이에 대해 “內鮮一體精神으로보아서도 크게慶賀할일”⁶⁸⁾이라 하는가 하면 “將來로內鮮간에 橫在하여잇는 모든문제를 해결하는열쇠라고볼수가있다”⁶⁹⁾고 하여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후 1942년 5월 8일의 각의(閣議) 결정으로 44년 7월 실시된 징병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진주만 기습이후 확대된 태평양전쟁의 확대와 동맹국 이태리의 단독항복(1943. 9. 8) 이후 불리해진 전세를 만회해 보려는 결전 비상조치로서의 의도는 은폐되었다.

최재서의 경우 징병제의 실시를 권리의 획득이자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징병제의 실시를 계기로 반도인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은 명료하다. 벌써 내선일체 운동의 綱領은 조선인이 진실로 황국신민이 됨으로써 대동아 共榮圈에 있어서의 지도적 민족이 되고, 그 건설에 참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그 목표를 의심할 사람은 없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한 가닥의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과 이념에 대해서 단적 명쾌한 해답을 준 것이 이번의 징병제의 발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조선인이 대동아 공영권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해나갈 길을 터놓은 것이다.⁷⁰⁾

최재서는 조선에서 실시된 징병제를 조선인이 진정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조선인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일제에 의한 인적수탈이 아닌, 책임있는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되는 것이었다.⁷¹⁾ 그에게 있어 이것은 동조동근의 관계였던 일본인과 조선인, 그리고 같은 천황의 적자로서 제창되어온 이론적 수사들의 현실화를 의미했다. 동시에 그것은 대동아 건설의 성전에 참가한

68) 최린, 「內鮮一家結成에 最後團結으로」, 『每日新報』, 1938년 1월 17일.

69) 최린, 「試鍊의初試設아니 撰質에置重할일」, 『每日新報』, 1938년 2월 23일.

70) 최재서, 「徵兵制實施의 文化的 意義」, 『國民文學』, 1942년 5·6월 合併號, pp. 7~8.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1)』, 실천문화사, 1986, p. 363, 재인용).

71) 석진, 앞의 논문, p. 41.

것이자 통치자의 ‘優位’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민족의 희생은 그들에게 권리의 획득이자 명실공히 황국신민이 되는 발판으로 이용된 것이다.

징병제의 실시와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창씨개명의 경우도 조선민족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다른 한편으로, 계속되는 전쟁에 조선인을 황군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책의 본질⁷²⁾이 외면되면서 ‘일체화’라는 표층만 강조되게 되었다. 유진오의 경우 「시국과 문화인의 임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선일체는 내선의 무차별평등, 일체화를 중국의 목표로 하고, 이 때문에 조선인의 국민적 자각과 문화교양을 내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진실로 숭고한 이념이며 조선의 민중이 창연히 이에 찬동하고 있는 현상은 극히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⁷³⁾

또한 김문집의 경우는 창씨개명의 의의를 역사적 근원에서 구하고 있다.

태고 옛적에는 내지와 조선이 완전히 하나의 집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도 같았고 음식물도 같았고 풍속이나 복장, 집 짓는 건축양식, 농농사 방식, 관리가 되는 의식, 이름붙이는 방식, (중략) 어떠한 것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략) 그 후 조선이 내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말도, 음식물도, 옷도, 사람의 이름붙이는 방식도 (중략) 이것은 우리들이 支那를 너무 숭배한 관계도 있는데 아무튼 아쉽기 짝이 없는 것은 이름붙이는 것까지 지나를 흉내냈다는 점입니다.⁷⁴⁾

김문집은 창씨개명의 의의를 일본과 조선이 태고의 관계로 돌아가는데 두었다. 이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통치하면서 사상적인 무기로 삼았던 日

72) 창씨개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미야다 세즈코,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일조각, 1997, pp. 59~102)을 참조.

73) 유진오, 「時局과 文化人の 任務」, 『總動員』, 1940년 2월號. (미야다 세즈코, 같은 책, p. 166, 재인용).

74) 김문집, 「半島風習のその祖國への合理的發展的歸還を論ずの言」, 『總動員』, 1940년 3월號. (미야다 세즈코, 같은 책, p. 93, 재인용).

鮮同祖論에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내지인 流의 씨명을 붙이는 것은 내지인과 하나가 되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당화되었다. 역사적 근원까지 동원되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은 부정되고 소멸되어야 했으며, 이는 당시 창씨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조선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으로 회귀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조선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191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당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다거나 정책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명화라는 일본의 지배논리에 대해서 조선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일본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⁷⁵⁾

강점 초기 지식인들의 이러한 시각은 일제말기 보다 극단적으로 이어지면서 제국의 신민으로 변절한 자신을 정당화시켜 나갔다. 결국 지배자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민족주의계의 국민화 담론 속에는 식민지 지배체제가 극복의 대상이 아닌 제국의 국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될 대상으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국민화 담론에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에 대한 불안정성과 여기서 벗어나고자 했던 열망이 혼재되어 있다. 당시 다수의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은 성장시절 망국과 개화를 경험했고 그런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문명개화를 주장하게 했다. 또한 일본을 매개로 습득한 근대지식인들은 근대문명에 예찬하게 만들었고, 근대문명과 일본을 동일시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의 몰입은 깊어졌고 그 속에서 식민지적 열등감은 심화되었다. 몰입은 미개한 조선의 자각으로 이어졌고 여기서의 탈출은 몰입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이것이 문명화 되지 못한 조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으로 합리화했지만 철저한 열등감에서 출발한 자민족 파악은 결코 조선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상처받은 자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

75) 1910년대 일본의 지배논리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은 이후 일제말기 지식인들의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해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지식인층의 인식: ‘日鮮同祖論’과 ‘文明化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46권(2001), pp. 213~227의 3장(일제 지배 논리에 대한 지식인층의 인식)은 본고의 분석 대상인 민족주의계열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국민화 담론’은 통치자의 지배담론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기 위한 욕망의 소산물이었다.

3.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 : 제국과 운명공동체로서의 ‘지도민족’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은 일제말기 식민지 사회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본 차별로부터 도피를 도모한 내선일체론과 이것의 연장선인 ‘국민화 담론’은 그러한 대안의 일부분들이었다. 그것의 모순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들은 식민지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던 지식인들에게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흥분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일본의 전쟁관과 상통하는 동아신질서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김활란은 태평양 전쟁을 “東亞十億의 民族을 저 양그로썩손의 손으로부터 解放하기爲하여 우리皇軍이 道義의싸움을하고있는”⁷⁶⁾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을 “도의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최정희 역시 “새로운동아의아침이오게된것”⁷⁷⁾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인식은 당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일본의 침략 이론인 동아신질서의 논리들이 지식인들에게 희망의 논리로 수용되었을까. 이는 앞서 살펴본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어떻게 식민담론을 내면화시켰는지 상호 연관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논의들을 정리해 볼 때 일제말기 이들 지식인들에게 가장 손쉬운 주체 확립의 방법은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었다. 제국의 지배담론이 그들의 길을 안내하였다면 1930년대 만주는 제국의 주체로 흡수되는 공간이 되었다.⁷⁸⁾ 여기서는 長春이 만주국 건국이후 新京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지식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가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당시 식민담론의 중심에 위치한 동아신질서의 논리를

76) 김활란, 「거룩한 ‘大和魂’을 銘心 - 敵擊滅에一路邁進」, 『每日新報』, 1943년 8월 7일.

77) 최정희, 「동아의새아침」, 『每日新報』, 1942년 2월 21일.

78) 배주영은 그의 논문,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韓國學報』 112집(2003), pp. 47~48)에서 만주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이자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만주를 통해 조선인들은 식민지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제국의 시민이 되는 복잡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활로개척의 논리로 인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유진오의 신경여행이 소설화된 작품 「新京」은 일제말기 만주를 복잡 다단한 역사적·실천적 장으로서 그려내고 있다. 유진오는 작품을 통해 조선 사람이 놓인 지위를 타개할 가능성을 제시⁷⁹⁾ 하였지만 이와 함께 제국주의적 침략도 보다 분명하게 긍정⁸⁰⁾하고 있었다. 실제로, 만주국 건국 이후 ‘日滿支 경제블록’의 기치아래 이전의 장춘은 웅대한 근대도시로서의 신경으로 새롭게 변모되었다. 이에 유진오는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서양의 지양으로서의 동양이 관찰되고 있는 신경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 기대하던 신경은 과연 철의 예상에 어그러지지 않았다. 남신경 근처부터 벌써 별판 이곳저곳에 맘모스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우뚝우뚝 보이더니 이내 웅대한 근대도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건설 도중이라는 느낌은 있었으나 갓 나온 연록색 벼들 사이로 깨끗한 콘크리트의 주택들이 깔리고, 멀리 보이는 큰 건축물들의 동양적인 지붕도 눈에 새로웠다. 이 건축의 새로운 양식도 동양이 서양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한 나타남일까 하고 철은 생각하였다.⁸¹⁾

글에서 만주국 이후의 신경과 이전의 장춘은 대립적 관계로 나타난다. 장쉐량(張學良)으로 대리되는 만주 군벌에 의한 ‘장춘시대’의 혼란함이 일제의 만주국 건국과 더불어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대목을 보면 작가 유진오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나타난다.

어찌 이렇게도 초라한가. 길 좌우에 주옥 늘어선 큰 빌딩들의 당당한 풍채와 호화로운 장식과 최신식 설비에 비해 카페·임페리알은 그 납작한 키며 누루칙칙한 빛깔이며 구식 뒹뒹이가 할일 없이 서울 한복판에 잡아다놓은 촌뜨기였다 (중략) 철은 다시금 그 동안의 변화의 심함을 뼈에 사모쳐 느꼈다. 역사는 변한다. 그 변하는 역사를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문득 보니 기운 좋게 포도를 거니는 양장

79) 이경훈, 「하르빈의 푸른 하늘: 벽공무한과 대동아공영」,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p. 197.

80) 같은책, p. 198.

81) 유진오, 「新京」, 『新時代』, 1942년 10월. (『한국소설문학대계』, 두산동아, 2000, p. 338, 재인용).

의 젊은 여자들이 거의 전부가 맨다리 맨발에 구두를 신은 그 나타샤의 차림차림이었다. 서울거리에서도 눈이 시도록 본 여자들의 이 풍속에서 새삼스레 역사를 느꼈다.⁸²⁾

춘츠키에 비유되는 이전의 장춘 모습은 이후 신경에 들어선 빌딩들의 새로움에 대조되었다. 따라서 당시 만주국 건설은 현실 인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에는 만주 신경의 패션이 식민지 경성의 패션과 유사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滿鮮一如’의 동화이데올로기가 그곳 만주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을 것이다. 동아신질서의 기반으로 일만지의 통합이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주창되던 시기, 대다수의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만선일여의 현실화는 그야말로 역사의 변화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관념적 공간에서만 국가를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지식인들에게 확장된 국가 개념은 새로운 주체로 비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조선이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구도를 벗어나기 어려운 장소였다면, 만주는 식민과 피식민의 현실적 구도를 은폐하면서 다종족 협동체로서의 국가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만주가 표상하고 있던 신생의 이미지와 새로운 주체의 가능성은 고노에(近衛文麿) 수상이 선포한 동아신질서의 구상과 이것의 이론적 뒷받침을 했던 동아협동체론, 그리고 동아연맹론 등이 제창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중·일 전쟁기에 담론화되었던 동아신질서론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이전의 아시아주의가 침략적 성격⁸³⁾이 농후한 반면 이 시기에는 침략 중지·건설의 성격⁸⁴⁾을 갖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82) 같은책, p. 342, 재인용.

83) 중국 공산당 창당의 주역 리 따자오(李大釗)는 「신아시아주의」(1917)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중국병탄주의의 은어”라고 비판했다. 리 따자오의 글은 백영서·최원식의 저서(앞의 책, p. 163)를 참조.

84) 중·일 전쟁 초기 승승장구하던 일본 군부는 예상치 못한 중국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교착상황을 맞이한다.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을 매개로 국공합작에 대한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 일-중 제휴론이다. 이 속에서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의 협동체 구축과 평화지향이라는 기치로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려 했다. 따라서 일-중 제휴론과 이에 따른 아시아주의의 제창은 표면적으로 침략의 중지와 건설적 성격을 나타냈다. 박태원의 「亞細亞의 黎明」(『朝光』, 1941년 2월號)은 이와 같은 일본측 주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동아의 협동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신질서의 구상은 조선인의 위치를, 일본-조선-중국의 관계로 상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속에서 지식인들은 제국주의적 침략 중지를 식민주의 포기로 해석하여 일본과 조선의 관계를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조선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졌다.⁸⁵⁾ 이렇게 조선의 지식인들은 새로이 전개되는 정치담론들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모색했지만 담론의 본질을 그들의 주관적 잣대로 재단하면서 제국 일본과 같은 시각에서 동아의 신질서를 구상해 나갔다. 식민지 조선이 제국 일본으로부터 경험했던 민족간의 차등은 제국의 울타리로 들어온 만주와 만주인들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들을 타자화시키고 서열화함으로써 제국 구성원간의 재통합을 꾀하려 했던 것이다. 만주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미개간의 ‘처녀지’이자 ‘야만’의 모습으로 상징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참으로 그곳 동포와 무슨 원수가 짓기에 그런 참혹한 거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원인보다도 그들의 무지가 그러케 한 것입니다. 일반으로 물을 무서워하는 만인들은 우리 동포들이 이민으로 드러와서 자기 동리압들에다가 별안간 논을 풀고 밭사이로 보퉁을 내서 바다와 가치 물을 대노앗스니 평생 논구경을 못한 그들은 자기네 동리가 금방 물로 망할 것가치 겁이 나서 미련하게도 수전을 개척한 동포를 도리혀 죽이게까지 한 것이올시다. 가만이 생각하면 세상에 이와가튼 무지가 어데 잇겠습니까? 그러나 무지한 그 사람으로 볼 때는 도리혀 그것을 정당히 생각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지와 편견과 모든 불의한 욕심은 이런 지옥을 이 세상에다 만드려냅니다. 그것은 크게는 나라가 그러하고 적게는 사회와 개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무지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곳 무지가 지옥을 낫는다는 말씀이올시다.⁸⁶⁾

85) 윤치호의 글, 「內鮮人은 同一運命; 巨船의 航海에 臨하야」(『每日申報』, 1937年 8月 15日)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日本帝國이란 巨船이 內鮮人을 한데태우고 바야흐로 港口에서 大海를向하야 出帆하려하고있다. 萬若이 巨船이 不幸히도風波를 만나서 難破한다든지 할것가트면 그속에타든內鮮人은 모다 한꺼번에 運命을가타고말것이다.”

오족협화(五族協和)라는 슬로건이 만주국의 건국이념이었음에도 만주인을 무지, 편견, 욕심으로 표상하는 것은 스스로를 식민자의 시각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채만식은 「大陸經綸의 壯圖 그 世界史的 意義」⁸⁷⁾에서 인종적 편견에 가득 차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1억 대일본민족” 속에 조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우수한 민족이 우수치 못한 민족보다 높은 지위가 요구되는 것은 성인이 소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식량이 요구되는 것과 똑같다”고 전제한 후 “내란과 탐관오리에 백색자본의 착취와 쿠리, 아편”밖에 없는 중국민족에게 중국의 땅은 과분하기 때문에 “동아의 長子인 우리 일본민족”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만식이 말했던 “동아의 장자”라는 인식의 기저에는 조선이 식민지화되면서 주입되어 왔던 일본의 문명화론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식민을 곧 문명화로 도식화하면서 일본을 문명국으로, 조선을 비문명국으로 대비시켰듯이 이제는 반대로 만주를 비문명과 야만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선일체를 통해 제국 일본의 국민으로 거듭나려 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강자의 논리를 구사하며 동아의 실력자로 위치되어진 일본과 같은 시각에서 만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⁸⁸⁾ 이렇게 만주의 미개함 뒤에는 제국적 질서의 중심에 서고 싶은 조선 지식인들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욕망은 다시 제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동아신질서와 동아협동체 이론을 ‘남방(南方)’으로까지 확대 적용했던 대동아공영주의는 그런 갈망이 투영되는 장이 되었다.⁸⁹⁾ 이는 동아신질서의 구상이 지식인들에게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식민지의 틀에서 벗어남을 의미했다면 대동아

86) 이기영, 「大地의 아들」, 『朝鮮日報』, 1940年 1月 13日.

87) 채만식, 「大陸經綸의 壯圖 그 世界史的 意義」, 『每日新報』, 1940年 11月 22日.

88) 이기영의 「大地의 아들」에서는 조선인의 장작의식을 경작방식의 차이를 인종적 우월성으로 치환하여 만주인을 인종적으로 타자화하고 동시에 가족주의적인 서열화를 통해서 종족간의 재통합을 꾀함으로써 아시아의 제종족 사이에 차등을 기반으로 하는 오족협화의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

89) ‘남방’이라는 공간에 투영된 조선 지식인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권명아, 「‘대동아 공영’의 이념과 가족 국가주의; 총동원 체제 하의 ‘남방’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24집(2004), pp. 745~782 참조.

공영주의에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난 지식인들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도모했다. 이른바 ‘지도민족’의 제창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지만, 이미 제국의 신민으로 주체를 확립한 그들에게 지도민족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그럼 어떻게 대동아공영주의와 지도민족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 언뜻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둘의 관계는 家族主義天皇制에 의해서 절묘하게 부합된다. 이 일본적 가족주의를 대동아공영주의로 확대하면 일본은 그 안에서 ‘本家’가 되고 여타의 제민족은 ‘分家’가 되는 것이다. 아래의 최재서와 이광수의 글은 이러한 가치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동아문화가 동양의 문화유산을 기초로 새로운 제민족의 민족성을 발휘한다손치더라도 민족성의 평면적 나열이나 무차별적인 주장만으로는 결국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중심이 없는 모임의 세대(世帶), 그것은 과연 민주적인 질서관에는 알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리는 태어나지 못한다. 질서에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포섭하고 또한 모든 것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존재케 하는 중심이 있어야만 한다. 대동아 신질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은 천황(天皇)이어야 하겠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가족을 이루고 있다. 동양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가족을 형성한다. 만방(만방)으로 하여금 각각 있는 곳을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⁹⁰⁾

大東亞共榮圈建設이라는 것은 全人類의 歷史에 前例가 없는 大理想이요 大經營이다. 亞細亞를 英其他 植民地의 桎梏에서 解放하여서 八紘一宇의 皇道文化社會中에 幸福과 繁榮을 長享케 하는 일등이다. 英國은 當時世界에 最富한 印度를 2세기간의 통치로 세계의 極빈자로 만들었다. 蘭印, 仏印도 모두 英國의 인도 통치와 同工異曲이다. 그들은 식민지의土民을 牛乳 以上으로 생각지아니하였다. 오직 착취하기爲하여서만 그生存을許하였고 그住民자신의文化繁榮은念頭에업섯다. 이것이過去영·불의大罪惡이다. 그런데 日本의 共榮圈이란 이러한 영·불의政策과는對照的이다. 各民族으로하여금 各得其所케하여서 共存共榮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오래 貪慾이 支配하던 地球上에 皇道の 新樂園을 建設하자는 聖된 事業이다. 이러한 大事

90) 최재서, 「大東亞意識の目覺.め」, 『國民文學』, 1943年 10月號, p. 139. (김병걸 · 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1)』, 실천문화사, 1986, p. 385, 재인용).

業에 翼贊하게되는것은 朝鮮人으로서 無上의 榮光이라고아니할수없다. 이번 사업에 大貢獻을 함이 업스면 길이後孫에게 遺憾이 될것ियो 羞恥가 될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今日の朝鮮人은 마땅히 一事報國의誠을 誓하고 此時局을위하여서 全力을 다바치지아니지 못할것이다.⁹¹⁾

이러한 대동아공영주의에 대한 지식인들의 편승적 반응은, 1938년 11월 3일 제1차 고노에 내각이 내세운 일본, 만주, 중국의 일체화를 근간으로 하는 동아신질서성명과 1940년 7월 26일 제2차 고노에 내각 결정의 대동아신질서 나아가서 대동아공영권으로 이어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논리의 변화와 확대에 따라 그 열기와 적극성이 높아져 갔다. 일본의 전쟁을 소위 ‘성전’으로 호언하고 나아가서 조선인의 사명을 새로운 동아문화를 부흥시키는 일⁹²⁾이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제국에 편승하여 그 이익을 도모하고 해소되지 못했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소위 ‘지도민족’의 밑바탕이었다. ‘지도민족’은 내선일체의 완성을 이루고 대동아 건설의 聖業에 그 중핵적 지도자로서 참가하겠다는 영광스런 희망에 대한 보상심리로 작동되면서 당시 지배담론과 절묘하게 부합했던 것이다. 특히 ‘지도민족’제창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명분으로 뒷받침되었던 점을 보면 그 본질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이광수와 김동환의 글은 이러한 ‘지도민족’의 개념이 어떻게 호도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諸君이 奮起한것이 었더케 歴史的인 大事件인가는 우리보다도 後世의 子孫과 史家들이 더욱 잘 알고 感謝할것입니다. 四千이란 數가 그리 큰 數는 되지못합니다. (중략) 그러나 四千이란 只今 朝鮮이 가진 거의 全部입니다. (중략) 諸君이야말로 凱旋後에는 全日本帝國의 幹部요 全아시아의指導者이십니다. (중략) 그러므로 諸君은 만다시 모조리 忠勇한 皇國軍人이 될 것을 確信하웁니다.⁹³⁾

91) 이광수, 「半島民衆의愛國運動」, 『每日新報』, 1941年 9月 4日.

92) 卷頭言, 「大東亞戰爭의 意義」, 『國民文學』, 1942年 1月號, p. 3. (정창석, 앞의 논문, p. 519, 재인용).

93) 이광수, 「學兵에게 感謝」, 『每日新報』, 1943年 12月 11日.

싸우고 또 싸우며 제3년 들어서다
 이날 아침 간절한 소원 두 가지 있사오라,
 첫째는 올해에 ‘적국 항복’ 꼭 받고 싶고
 둘째는 우리 동포 모두 □□指導民族□□ 되어지이다.

(중략)

‘指導民族’되기 위해 우리 모두 무장하여
 폐하의 주신 劍으로 ‘조국일본 강토’ 지키옵고저.
 또 우리 아이 모두 ‘의무교육’ 받아 지혜롭고
 백성들은 ‘鍊成’받아 兵農一如에 달하옵고저.⁹⁴⁾

인용된 글은 “개선” 후에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는
 가 하면 “지도민족”으로 되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글의 공
 통된 사항은 ‘지도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선인의 참여와 노력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결국 ‘지도민
 족’이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인, “2천 3백만의 뜨거운 피”⁹⁵⁾가 희생되
 어야만 했으며, 이것이 곧 제국과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이었다. 이른바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로 대두된 ‘지도민족’은 제국 일본의 침
 략전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제국 일본에 편승하여 ‘동아의 장자’
 로 대표되려 했던 것이 동아신질서의 구상이었다면 대동아공영주의에서는
 ‘본가’의 구성원으로서 제국과 함께 지도민족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
 게 당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은 팽창하는 제국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동
 시에 기대려는 편승욕구도 드러냈다. 그러나 이렇게 굴절된 의식의 표출은
 지식인들 스스로가 식민지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식민주체’로 거둬나게 만들었다.

94) 김동환, 「敵國降服 받고지고」, 『每日新報』, 1944년 1월 6일.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
 品選集(1)』, 실천문학사, 1986, pp. 191~192, 재인용).

95) 주요한, 「첫피」, 『新時代』, 1941년 3월號. (김병걸·김규동 편, 같은 책, pp. 132~136, 재인용).

4. 친일에 대한 신념의 획득과 열정적 행동

1) 자기최면에 의한 신념의 획득

당시 제창되었던 지배담론들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다. 이 속에서 제국의 담론과 그 궤를 같이 하며 표출되었던 것이 신민으로서의 국민과 지도민족이었다. 여기에 일본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정신이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지식인들의 정체성은 이와는 무관할 수 없다. 정체성의 확립은 외부적 요인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기의 결단이 개입될 때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단은 신념의 획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시 지식인들의 신념에는 자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변질된 지도자 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아래는 ‘친일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이광수의 고백에 관한 글이다.

어차피 당할 일이면, 자진하여 협력하는 태도로 하는 것이 장래에 일본에 대하여 우리의 발언권을 주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중략) 징용에서는 생산기술을 배우고, 징병에서는 군사훈련을 배울 것이다. 우리 민족의 현재의 처지로서는 이런 기회를 제하고는 군사훈련을 받을 길이 없다. (중략) 만일 일본이 이번 전쟁에서 이긴다 하면 우리는 최소한도로 일본 국내에서 일본인과의 평등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설사 일본이 저서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가 곧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협력한 것은 이 일에 장애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백성이므로 전시에 있어서 통치자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또 우리가 전쟁 중의 일본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중략) 일본은 우리 민족을 더욱 탄압할 것이다 (중략)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어떠한 손해가 있을 것인가. 나는 아무 손해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중략) 반항할 수 없으니 가는 것이요, 가족이나 동족이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가는 것이었다. 이왕 가는 길이니 발길에 채면서 끌려가지 않도록, 가서라도 미움받이를 덜하도록 하자는 것이 곧 협력하는 태도라는 것이었다. 또 어차피 흘리는 땀이요, 어차피 흘리는 피일진대, 만일의 경우(일본

이 이기는 경우)에 그 값이나 받도록 하여 두자는 것이 附日협력의 동기였다. (중략) 만일 이 몸을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동포의 희생을 덜고, 터럭 끝만치라도 닦쳐오는 민족의 고난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하면, 내 무엇을 아끼랴.⁹⁶⁾

이 글에서 확인되는 것은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헤어날 길 없는 패배의식과 변질된 지도자의식이다. 이 서글픈 의식은 자민족을 노예의 길로 몰아넣으면서도 민족을 위해서라는 순교자적 자기환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자민족 멸시와 불신으로부터 현실에 대한 체념이 나오고, 그 비극적 민족파악으로부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는 것만이 민족의 희생을 줄이는 길이라는 패배주의의 정당화와 합리화가 등장하는 것이다. 침략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민족의 희생을 더욱 배가시킨다는 현실인식은 없다. 여기에 있어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은 조선인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제국 일본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에 불과했다. 그것도 조선민족이 소위 문명인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나 가능한 그 무엇이였다. 이렇게 조선인으로부터는 현실을 타개할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광수의 비관론은 현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에의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과 조선인에게 현실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이광수에게 있어서 적어도 일본제국주의는 강한 확신을 갖고 현실에 임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실상에 상응하는 정당한 해석을 초과해서 해석틀을 과잉 적용할 때 실상은 재단되고 만다. 그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조선인은 주체적 행동원리와 자결적 권리가 없었으므로 일본제국주의가 저 전쟁에서 이겨도 져도 일본제국주의에의 가치의존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광수의 ‘天皇歸一’이 보여주는 이상주의적 헌신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의식 작용은 하나의 신념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기울어져 가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선견성은 발휘 될 수 없었으며⁹⁷⁾ 몰아적 비장감에 젖은 자기 헌신만

96) 이광수, 『나 / 나의 고백』(又新社, 1986), pp. 243~247.

97) 당시 지식인들이 얼마나 선견성에 어두웠는지는 조용만의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도 알 수 있다.

이 자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최면은 약육강식의 논리와 근대화지상주의로의 함몰과 적극적인 친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국의 침략전쟁으로 인한 조선인의 희생을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할 수 있었던 것도 “강한 자는 이기고 약한 자는 지는 것은 공평한 일”⁹⁸⁾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했다.

그렇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는 공평한 일이 되는 것이며,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이미 근대화지상주의에 몰입되었던 당시 다수의 지식인들에게 ‘힘의 논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엘리트가 근대화를 주동함에 있어서 생기는 대중의 희생은 불가피하며 ‘근대화’ 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문명’을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인 것이다. 여기에는 오직 근대화의 목적과 계몽의 대상만이 존재하게 된다.⁹⁹⁾ 교만한 엘리트적 자부심은 조선민족 전체를 계몽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게 만들었고 ‘근대의 주체’였던 제국 일본과 같아지도록 강요하게 했던 것이다. 계몽의 대상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기최면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헌신이자 봉사였기에 제국에 대한 협력, 이른바 친일의 길은 양심이라는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최면에 의한 자기합리화의 모습은 심지어 종교적 차원의 내면화된 모습까지 보여준다. 아래는 이광수와 서정주의 글이다.

내가 학도병 권유로 동경에 갔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밤늦게 대학생 셋이 내 여관에 찾아왔다. 나는 열이 나서 누워 있을 때였다. 그 중 한 학생이, “우리가 나가 죽으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겠나?”하고 입을 열었다. “그대가 안 나가려면 안 나갈 수가 있나?”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들은 한숨을 짓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이윽고 다른 한 사람이, “우리가 나가서 피를 흘리면 그대는 우

“아홉시에 나는 신문사로 들어가는데, 대문앞에 큰 길에서 최재서를 만났다. 일본말로 문학잡지를 내고 있었고, ‘조선국 사령부’와 총독부 고위층과 매우 가까운 터로 그때 이름을 날리던 문학평론가이었다. 그는 그때의 복장대로 전투모, 국민복에 각반을 치고 있었다. 이제는 성가신 각반을 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나온 나를 보고 “왜 각반을 안 치고 다녀요. 반전문학 타령이나 하고, 당신은 비국민이야!”하고 비난하면서 지나갔다. 그는 총독부와 군부하고 가까우면서 그때까지 일본이 항복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조용만, 『울밑에 핀 봉선화야: 30년대 문화계 산책』, 범양사, 1985, p. 187).

98) 이광수, 「想華」, 『三千里』, 1941年 1月號. (이광수, 『李光洙 全集8』, 삼중당, 1971, p. 366, 재인용).

99) 이에 대해서는 박성진의 앞의 책(5장의 3절, ‘민족개조론의 사상적 성격’, pp. 168~169)을 참조.

리의 피값을 받아 주겠는가?”하고 물었다. 이것은 참말로 큰 물음이었다. 나는, “그대들이 피를 흘린 뒤에도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좋은 것을 아니 주거든,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싸우마.”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속으로 이 젊은이들의 피값을 받으려고 피를 흘리는 나를 상상하였다.¹⁰⁰⁾

이날은 대성전기념일도 축제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받은 깃대에 국기를 한번 훑아보고 싶어서 건딜 수가 없었다. 나는 오히려 땀까지 흘려가며 벽장 속에서 국기를 꺼내어 그 깃대에 매었다. 탄탄한 깃대에 비해서는 벌써 장만한 지 해가 겹친 국기의 깃폭은 낡아 보였다.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 뒷집에서 깃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나는 거기에 맞추어야 할 새로운 깃폭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던 것인가. 나는 깃대에 꽂힌 국기를 방 아랫목에 세워두고 한참동안 합장을 하고 있었다.¹⁰¹⁾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젊은이들 앞에서 자기최면으로부터 나온 자기신념에 빠져 들어가는 이광수의 기만적 모습이 확연히 그려지고 있으며, 대성전기념일도 축제일도 아닌 보통의 일상에도 일장기가 보고 싶어 지극 정성을 다하는 서정주의 내면세계의 일면이 표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제국주의는 언제까지나 근대문명 그 자체였다. 이것은 일본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문명화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기대감은 조선인이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논리에 순종할수록 제국으로부터 반드시 무언가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수혜적이고도 노예적인 희망으로 나아갔다. 그렇기에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확신은 모든 것을 제국으로 환원시키려는 신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몇백년은 일본의 지배 속에 아리나 쓰리나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별수가 없다”¹⁰²⁾는 무지와 체념으로까지 발전되었던 것이다.

100) 이광수, 앞의 책, pp. 248~249.

101) 서정주, 「隣保情神」, 『毎日新報』, 1943年 9月 2日.

102) 서정주, 日政末期와 나의 ‘親日詩’, 『新東亞』, 1992年 4月號, p. 492.

2) 친일정서의 창출과 열정

일제 강점 말기에 자타가 공인하던 조선의 지식인계층들이 일제의 협력자가 되어, 내선일체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민족을 체찍질했던 안타까운 현실을 이해하기란 진정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선택했던 길은 분명했다. 희망이 없고 여겼던 현실 속에서 그들은 친일의 길로 활로를 모색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제국주의에의 협력이었다. 협력을 통해 그들은 공적영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 변화를 ‘진정한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조선인의 ‘位相提高’였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제국에 있어 조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것이며,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조선인 전체에 요구되는 것이었고 또 그해야만이 변화되는 제국의 영역 내에서 조선인의 지위가 타개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지식인들의 요구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인의 민족정신, 즉 조선인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식인들에게 조선민중의 정서는 변화 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은 마치 문명화 되지 못했던 계몽의 대상을 선도하는 것과 같았다 할 수 있다. 선도의 방법은 달라질 것이 없었는데, 이는 제국 일본으로 동화되기 위해서 제창되었던 지식인들의 논리가 보편적인 가치로 치환되었듯이 다양한 정서들을 창출함으로써 제국에 있어서 조선인의 책임과 의무를 보편화 시켜나갔다. 그럼 당시 지식인들이 창출했던 정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당시 수많은 ‘친일 성향의 글’들은 명확하게 답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였고, 아울러 이러한 정서들은 당시 지배담론이던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인들, 그 중에서도 차별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지식인들이 희망했던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었다.

아래는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을 다룬 것으로, 서양의 오랜 억압에서 동양을 해방시킨다는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운숙의 시이다.

검은얼굴아!
 외로웠든 馬來의處女야!
 네 슬픔이 너무 길어
 제 압힘이 너무 진하여
 너는오래 이어나지못하였다.
 가는사람 오는사람
 산호로 장식한 武士
 聖書로德을 말하는偉人
 世界의문화를 질머진行人들이
 수업시 네엽홀 지나오고 지나갓건만
 너는언제한번 우서본일이잇더냐?
 언제한번 故鄉의열쇠를 만져본일이잇더냐?
 네영혼은 검은채직에 임의흐렸고
 네사는쌍은 원수의발미테 숨을일었섰다.
 쌍미트로새여흐르는 눈물
 바다우으로 사라지는 네한숨
 누가알더냐?누가알더냐?
 百年이넘도록
 몇祖上이 박귀도록
 너는 僞善者의발밋에서 썰고 파리하여 주저안젓섯나니
 아모도 이사슬을 풀어준자업섰다.
 (중략)
 大和魂의칼이번득이자
 사슬은쓴키고
 네몸은
 한번에 풀려나왔다
 處女야!昭南島의處女야!
 인제사철중얼거리는 물결소리와
 야자나무에 불니는바람들이
 다시제가슴에 눈물을갓어오지안으리라¹⁰³⁾

103) 모윤숙, 「호산나 · 昭南島」, 『每日新報』, 1942年 2月 21日.

모운숙은 ‘감격의 정서’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시에 담고 있다. 이는 “僞善者의 발밑에서 썰고 파리”했던 동양은 이제 “大和魂의 칼”을 지닌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방된다는 표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양이 차지했던 어둠의 공간에 놓여 있던 아시아를 서양의 어둠에서 해방시킨다며 침략했던 대동아 전쟁은 ‘10억 동아 제민족의 새로운 세상’¹⁰⁴⁾이라는 미명아래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의 침략성과 해방성 중 후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시킨 명분을 통해 조선인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대표되는 대동아공영권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선인의 희생과 이를 내재화시키는 식민지 권력을 정당화시켰다. 이른바 식민지 지식인들의 지식과 식민지 권력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담합의 이면에는 황민화 정책의 철저한 내재화와 허구를 허구로써 인정하지 못하는 왜곡된 신념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이러한 열정은 식민담론을 미화하는 다른 정서들을 재생산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식민담론을 미화했던 정서들은 일본제국주의 아래 행해진 폭력들을 예술처럼 신비화하고 개인의 희생을 성스러운 대업에 대한 영광스런 애국심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전시동원’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내려 했다. 아래의 시국에 대한 태도로 조선인의 철저한 황민화를 자랑과 의무로 실현시킨 송금선의 글은 “절실한 애국심”이란 감성적 수사들을 통해 선동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는 어디를가는지 정말로 황국신민이 완전히 되었다는 자랑과 의무를 늦길 수있게되었습니다. 이것으로인하여 반도민중의시국에대한태도는 더욱 철저하여져서 내아들, 내동생을 나라에바쳤다는 절실한 애국심이 북도두어질것임에 싸러—천만 반도여성들도 군국의여성으로서 그책임의 중대함을 더욱 굳세이게 늦길수있게되었습니다.¹⁰⁵⁾

104) 최남선의 수필 「亞細亞의 解放」(『每日新報』, 1944년 1월 1일)과 「聖戰의 說文」(『新時代』, 1944년 2월號)을 살펴보면 大東亞 戰爭이 어떻게 미화되고 형상화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05) 송금선, 「軍國어머니 半島女性責務도크다」, 『每日新報』, 1942년 5월 10일.

이러한 감성적 표현은 제국의 ‘공영권’ 건설을 위해 필요했던 인적자원 동원의 하나였던 징병제에 있어서 그 절정을 보여준다. 제국 일본의 침략 전쟁이 서구로부터 억압된 동아를 해방하는 성전이라 칭해졌던 것처럼 이 성전에 임하는 것은 영광이요, 그렇기에 당연히 조선인에게 요구되는 의무이자 애국심이었다.

아래의 윤치호와 김동인의 글을 통해 앞에서 열거한 감성적 표현들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적 구상에서 빚어나오는 대동아전쟁의 이념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대동아 10억 민중을 끌기게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자원의 쟁탈전으로 끝난 제1차 세계대전과 달라서 어디까지고 악랄무도한 미·영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물리쳐 자유로운 동아, 동아민중의 동아를 건설하기 위한 자위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현실은 종래의 선입감을 일척하고 모든 외면적 현상을 벗겨 내부에 잠재하는 가장 樞要한 본질을 직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백 만가지의 아름다운 형용사보다도 단 한가지의 실천, 즉 몸소 부딪쳐 현실을 해독하고 현실 위에 현실을 쌓아나가는 역사적 창조성만이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한가지 길이다. 그것은 맹목적인 행동주의도 아니요, 하물며 까닭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현실은 벌써 그에 대한 이론적 전제를 운운하는 것을 용서치 않는다. 이번 조선학도들에게도 내지동포들과 어깨를 겨누어 싸움터로 나설 수 있는 영광스런 길이 열렸다.¹⁰⁶⁾

학병을 권유하는 윤치호의 연설에서 조선인의 희생은 곧 영광스런 길이 열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 제민족을 위한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경사가 되는 것이고 이를 맞는 자는 환희에 차게 되는 것이 된다. 아래의 글은 이런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김동인의 소설 일부분이다.

예로부터 작별은 슬픈 일이라 정하여 놓았다. 장차의 기꺼운 상봉을 약속하는

106) 윤치호, 「總出陣하라」, 『每日新報』, 1943年 11月 18日.

작별일지라도 그것이 작별인 이상은 슬픈 일이다. 장차의 상봉이 아무리 기쁜 일일지라도 그런 것을 타산할 수 없으리만치 작별이란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런 인간 법칙을 무시하고 이즈음 내일 경성역 역두에서는 환희의 작별, 웃음의 작별이 연출된다. 장차의 기꺼운 상봉을 약속하는 작별이 아니다. 기꺼운 상봉은 커녕 다시 만날 날이 있을는지 어떨지 그것조차 기약할 수 없는 비통한 작별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환희로 보내고 환희로 떠난다. 학병-학병을 보내는 사람. 붓을 잡던 손에 붓 대신 칼을 잡고 부르심에 응하여 용감히 정의의 대로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젊은 용사는 여기서 인간정애의 마지막 겨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황군이라는 단일한 호칭 아래서 나랏님 발 앞에 몸을 내어던지는 신과 구의 생활의 갈랫길의 그 분기점이다. 어제까지도 부모에게는 불초자요, 동생들에게는 욕심쟁이요, 선배들에게는 귀찮은 짐이요, 동무들에게는 때꾸러기던 이 소년이, 여기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옷을 갈아 입을 때는 그는 폐하의 충량한 신자요, 국가에는 튼튼한 간성이요, 사회에는 거룩한 질서보호자가 된다. 그러기 위하여 그 겨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기를 떠나는 작별이니 보내는 이, 가는 이 한결같이 이 경사에 환희하지 않으랴 (중략) 손에는 한결같이 일장기를 표식으로 들고 흥분된 얼굴과 긴장된 태도로-아아, 이 무리의 중심이 되어있는 한 씩씩한 젊은이가 오늘의 주인공이요, 기쁨의 작별, 환희의 작별을 하고 받으며 어마전(御馬前)에 육척신(六尺身)을 바치려 나가는 우리의 용사다.¹⁰⁷⁾

일본제국주의의 태평양전쟁은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 동아의 해방으로 미화되었고 허구적 구호 아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은 망각되게 되었다. 현실의 왜곡·은폐는 조선인의 정신을 통제하고 나아가 신체를 억압할 수 있는 권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당시의 친일정서는 계몽의 대상이 되는 조선의 대중들이 근본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사학들을 보편적인 선의 가치로 치환시킴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자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부분까지 작동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통치자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러한 폭력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사유를 마비시켜 이에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했으며 이것이 곧 지식인들의 열정적 계몽의 목표가 되었

107) 김동인, 「日章旗의 물결」, 『毎日新報』, 1944년 1월 20일. (김병걸 · 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1)』, 실천문화사, 1986, pp. 121~122, 재인용).

다 할 수 있다. 이런 열정적 수사어구로 꾸며진 순종적인 자아, 복종하는 자아는 박인덕의 논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장에설새에는 한목표를향해 다라날것입니다. 그는엇더케 하면 제一작을할수가잇슬가를 늘마음에두고 그것을 엇기게노력할것입니다. 경주자가 이마음이업스면경주는안되는것입니다. 승리하는사람의첫조건은일착하겠다는 마음만을 가질것입니다 (중략) 이세상에는 세가지 타입의 사람이 잇습니다. 하나는 일을 당할새에 이것은 할수업다는사람 또한 나는 고만두겠다는 사랴도하나는 이견하겠다는사람이 잇습니다. 우리는 이결전체제하에 이것은 이기고야말겠다는 마음을 철저히먹는타입의 사람들이 되서야겡습니다. 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정부와지도자의말슴을절대로신임하고 다만입을다물고 압흐로 달리는경주자의 태세를가질것입니다.¹⁰⁸⁾

결국 일제말기 친일지식인들의 계몽에 대한 열정은 조선의 민중들로 하여금 의식적 자기부정을 내재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허울 좋게도 의식적 자기 부정은 소위 “小我 멸해, 大我의 거듭남”¹⁰⁹⁾이란 예술적 기제로 형상화되면서 민족에 대한 배신을 조선민족의 위상제고로 덮어 버렸다. ‘10억 동아’란 대의 앞에 철저히 도구화되었던 조선은 민족의 지도층이었던 지식인들의 화려한 筆力과 교묘한 논리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새로운 조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열정적인 정서의 창출 작업은 이른바 계몽되지 못한 조선의 민중들을 깨우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서의 창출을 위해 쓰여 졌던 수많은 글들이 자발적이나 강요에 따른 것이냐는 문제를 떠나 당시 조선사회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08) 박인덕, 「正戰을 뒤에 지키는 盟誓(二) - 필승의신념으로 히망을향하야나아가자」, 『每日新報』, 1941年 12月 20日.

109) 김상용, 「님의부르심을바쁘고서」, 『每日新報』, 1943年 8月 4日.

IV. 結 論

과거가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화적 태도에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경험은 해방과 더불어 종언을 고하지 못하였고 우리 안에 내재하여 반복되고 있다. 문명의 이데올로기는 문명국을 바꾸었을 뿐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서 경제, 교육, 학문 등 여러 사회제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문명화, 이것은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이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자강을 통해 문명화를 이루어 부국강병을 이루겠다는 것은 소박한 이상이였다. 민족을 깨우치고 제국에서 조선의 새로운 위상을 提高하고자 했던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바람은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로 전도되고 비틀어져 그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식민담론의 반복과 재생산을 통해 그 담론에 호명된 주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식하였다. 제국주의 세력이 종속민들에게 부과한 인식론적 질서에 의해 식민지 사회가 유지된다는 탈식민 이론¹¹⁰⁾의 주제는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탈식민 이론의 덕분으로 우리는 식민지 사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상 식민주의자들의 담론적 기획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문명론에 열광하여 침략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들의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 국가보다 문명화를 우선으로 하였고,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주체라는 그들의 욕망을 민족의 장래보다 긴급하게 생각하였다. 친일 행위가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와 같이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친일이라고 선고를 내리기에 앞서 이것이 어떠한 내적 논리와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1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석구, 「탈식민주의와 탈구조주의」 ·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고부웅 著(문학과지성사, 2003, pp. 188~219, pp. 223~255)과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푸른역사, 2005, pp. 429~432)을 참조.

이 속에서 민족주의의 개념을 변질시켜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1930년대 들어 대륙으로 팽창했던 일본은 장기간의 전쟁수행으로 절박한 위기상황을 맞이했고, 이것의 돌파구로 여러 가지 정치적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여기서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전면전이 갖는 국가적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나아가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하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성일 행사와 단체의 조직을 확대·강화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선인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협력의 자발성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일본은 이미 강점 이전부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당성을 창출하고 유포시켜 왔다. 이렇게 꾸준히 전개되어 왔던 일본의 식민담론은 1930년대를 정점으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른바 민족말살의 황민화 정책 앞에 조선은 준립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 진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온건적이고 타협적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지만 공개된 영역 내에서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들 역시 이제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양자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만 했다. 물론 가혹한 황민화 정책이 민족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시련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정책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일부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행위마저 시대적 정황론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일제말기 전쟁의 정당성 확보와 전시동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생성되었던 식민담론은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수용되었고, 여기에 지식인들의 내재된 욕망이 결부되면서 친일담론들은 자기 발전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내선일체’에 대한 인식을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 대한 내재된 열등감을 체질화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본에 대한 몰입은 식민지적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몰입은 자민족에 대한 부정과 개조로 나타났고, 그것의 타개책으로 제국의 국민이라는 ‘국민화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이 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길은 제시될 수 없었으며 통치자의 지배담론 속에서 지식인, 자신들의 ‘비전’만을 도모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나아가 새로운 주체

로서 제시되었던 ‘지도민족’이라는 개념에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외연적 확대에 편승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다수의 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민담론의 재생산활동을 통해서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은 스스로가 식민지인이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망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식민주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불행히도 당시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일본제국주의는 언제까지나 근대문명 그 자체였고 이것은 조선인이 지배논리에 순종하면 할수록 통치자로부터 반드시 무언가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민족 비하의 패배주의적 사고로 나아갔다. 이러한 확신은 모든 것을 제국으로 환원시키려는 신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민중에 대한 어긋난 계몽의식도 만들어냈다.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에게 일본의 침략은 충격이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명화의 시작이요 새로운 주체로 발돋움하는 시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은 미화되고 찬양되었을 뿐 일본의 침략과 그로 인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참담한 현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혹자는 오히려 당시 지식인들의 굴절된 자화상을 식민지적 차별을 극복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차별의 극복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의 친일 행동이 민족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조선인의 위상제고를 위한 것이었다면 민족의 노예적 수탈을 강화하는데 협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일제말기 일부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이 지배자의 식민담론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던 모습들은 그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길이라 했더라도 분명 타협과 순응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정될 수 없다. 물론 민족의 장래라는 것도 제국 일본의 국민됨을 의미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그것이 과연 조선을 위한 길이었는가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1930년대 이전의 민족운동에서도 그 전개과정에 있어서 지배자와의 타협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의 ‘민족주의계’ 지식인들의 움직임은 보다 실질적인 타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배자의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 지식인들이 지배자로부터 회유 받는 수동적 위치에서

조선의 민중들을 다시 회유하는 능동적 위치로 나아가고자 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이들에게 어찌면 친일이란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현실적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참고 문헌

I. 자료

1. 정기간행물, 신문 · 잡지

『京城日報』

『國民文學』, 1942. 5·6月 合併號.

『每日新報』

『三千里』, 1941년 1月號.

『新時代』, 1944년 2月號.

『朝光』, 1939년 9月號.

_____, 1941년 2月號.

_____, 1943년 3月號.

_____, 1943년 4月號.

『朝鮮日報』

2. 개인일기

宇垣一成, 『宇垣一成 日記』, 國學資料院, 1999.

尹致昊·김상태 편역, 『尹致昊 日記: 1916~1943 :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2.

II. 연구 논저

1. 단행본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강만길 외,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2004.
- 강만길 외, 『한국의 지성 100년: 개화사상가에서 지식 계릴라까지』, 민음사, 2001.
-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3.
- 고부웅,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4.
-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 김병걸·김규동 편, 『親日文學作品選集(1)·(2)』, 실천문학사, 1989.
- 김삼웅·이헌종·정운현 공편, 『친일과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 김열규 외,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새문사, 1994.
-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3.
-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사, 2005.
- 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김학민·정운현 엮음, 『親日派 罪狀記』, 학민사, 1993.
- 김환희, 『국화꽃의 비밀』, 새움, 2001.
- 미야다 세즈코(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 일조각, 1997.
- _____,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정재정 편역, 혜안, 2002.
-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編), 『朝鮮總督諭告·訓示 集成 5』, 綠蔭書房, 2001.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 1986.
-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도서출판 선인, 2003.
- 박지향 외 엮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2006.
- 박찬승,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 _____, 『친일파 99인』 1·2·3, 돌베개, 1993.

- 방기중, 『일제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2004.
- 백영서·최원식,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서정주, 「日政末期와 나의 ‘親日詩」, 『新東亞』, 1992年 4月號.
- 송이랑,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방식』, 세종출판사, 1999.
- 양춘, 『한국사회 계층구조와 동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에릭 호퍼, 『대중운동론』, 유석중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2,
- 유진오, 「新京」, 『한국소설문학대계』, 두산동아, 2000.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4.
- 이광수, 『나 / 나의 고백』, 又新社, 1986.
- _____, 『李光洙 全集8』, 삼중당, 1971.
- 이성환, 『전쟁국가 일본』, 살림출판사, 2005.
- 이중연, 『‘황국신민’의 시대』, 해안, 2003.
- 이충우, 『京城帝國大學』, 다락원, 1980.
- 임종국, 『親日文學論』, 평화출판사, 1986.
- _____, 『실록친일파』, 돌베개, 1996.
- _____, 『日帝侵略과 親日派』, 청사, 1982.
- _____, 『일제하의 사상탄압』, 평화출판사, 1985.
- _____, 「일제 말 친일군상의 실태」,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한길사, 2004.
- 정운현,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 개마고원, 1999.
- _____,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도서출판 없어지지않는이야기, 1997.
- 정일성, 『(일본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
- 조관자, 「민족의 힘」을 욕망한 ‘친일 내셔널리스트’ 이광수,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 조선문학가동맹 엮음, 최원식 해제, 『건설기의 조선문학』, 온누리, 1988.
- 조용만, 『울밑에 핀 봉선화야: 30년대 문화계 산책』, 범양사, 1980.
-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서경문화사, 1997.
- 최원규, 『日帝末期 파시즘과 韓國社會』, 청아출판사, 1988.
- 최재서, 『印象과 思索』, 연세대출판부, 1977.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민족문제연구소, 2004.

한일관계사연구논집편찬위원회,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2005.
히로마쓰 와타루(廣松渉), 『근대초극론: 일본 근대 사상사에 대한 시각』,
김향 옮김, 민음사, 2003.

2. 연구 논문

- 김경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2000.
- 김명구, 「한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론과 민족주의 사상」,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정현,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논리와 실체」, 『역사비평』 통권 26호 가을호, 1994.
- 류시현,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연구」, 고려대 사학과 博士學位論文, 2005.
- 박수현, 「전시과시증기(1937-1945) 조선 지식인의 체제협력 양상과 논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 박순애, 「朝鮮總督府의 情報宣傳政策」, 『한중인문학연구』 9, 2002.
- 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韓國學報』
112집, 2003.
- 변은진, 「日帝 戰時과시증期(1937-45) 朝鮮民衆의 現實認識과 抵抗」, 고려대
사학과 博士學位論文, 1998.
- 서중석, 「한말, 일제침략하의 자본주의근대화론의 성격」,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석진, 「일제말 친일문학의 논리 연구」, 홍익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2004.
- 예지숙, 「일제하 김활란의 활동과 대일협력」, 서울대 국사학과, 『韓國史論』
51권, 2005.
- 이경훈, 「만주와 친일 로멘티시즘」, 『한국근대문학연구』 7호, 2003.
- 이지원, 「일제하 민족문화 인식의 전개와 민족문화운동: 민족주의 계열을 중
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종민, 「전시하 애국반 조직과 도시의 일상통제: 경성부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24권, 2004.

- 장용경, 「일제 植民地期 印貞植의 轉向論」, 『韓國史論』 49권, 서울대 국사학과, 2003.
- 전상숙, 「일제군부과시즘체제와 ‘식민지 과시즘」, 『東方學志』 124집, 2004.
-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지식인층의 인식: ‘日鮮同祖論’과 ‘文明化論’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46권, 서울대 국사학과, 2001.
- 정창석, 「‘內鮮一體’論理의 樣相」,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42집, 1999.
- , 「‘大東亞意識’과 韓國人」,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51집, 2002.
- 조동구, 「친일문학연구: 친일문학논리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부산 공업대학교 논문집』 제36집, 1994.
- 지승준, 「1930년대 사회주의진영의 ‘轉向’과 大東民友會」, 『史學研究』 제55·56합집, 한국사학회, 1998.
- 최유리, 「일제 말기 징병제 도입의 배경과 그 성격」, 『外大史學』, 2000.
- 최유리, 「日帝 末期(1938년-45년)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대 博士學位論文, 1995.
- 한궁희, 「국민정신청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민족문제연구』 10권, 민족문제연구소, 2004.
- 한왕택, 「개화기에 있어 병식체조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1권 제2호, 2002.
-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홍종필, 「日帝時代 朝鮮에 있어서 志願兵制度의 展開와 그 意義에 대하여」, 『명지사학』, 1997.

ABSTRACT

Korean Nationalist intelligentsia's Accommodate of Colonial Discourse and Usual Perception in The Late Japanese Imperialism

Do, Seung Hyu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I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and analyze the problem of pro-Japanese. Especially, the target of this analysis is pro-Japanese activity of the intelligentsia, which has been the essence of pro-Japanese problem. In this study, Intelligentsia's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period of war footing, will be analyzed.

Imperialist Japan, after Invading a continent, strongly established the wartime mobilization system by advocating *Naeseonilche*(內鮮一體). *Naeseonilche* was stressed because of the necessity that the people of *Joseon* had to conduct war positively just like Japanese. Accordingly, thought control was performed thoroughly and of course,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was exploited intellectuals of *Joseon* were suppressed and monitored, and they were won over or forcibly converted into Japanese side. As a result, the majority of intellectuals had to

accommodate the established system or keep silent whether of their own will or not. And a good many of them positively participated in pro-Japanese party. However, this is not only because of the external factor of thought suppression. A good many of intellectuals had been inclined to make a compromise with imperialist Japan since 1920, and especially, they had accepted the point of view that *Joseon* couldn't achieve independence for the expansion of Japanese imperialism since the Manchurian incident.

In this period, the most typical activities of them were to collaborate and make propaganda for imperialist Japan by the written words. Most of their written words were about *Naeseonilche*, *Hwangminhwa*(皇民化), admiring the war, and collaborating with it. Their logic was that the people of *Joseon* had to accomplish *Naeseonilche* and strive to become subjectss of the Emperor of Japan. In order to realize those matters, they had to collaborate with the war positively. In addition, they emphasized that the aggressive war of imperialist Japan was a holy war for the peace of Asia.

Colonial discourse that oppress the people of *Joseon* into totalization and repeat the logical violence are possible to image identical subject in Imperialist Japan, make intellectuals of *Joseon* a new subject. But that is nothing more than internalization of colonial rule. Colonial discourse shows that the Japanophile matters of intelligentsia during colonial period could not access through only the matter of ethic moral, that matter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lonial subjectivity though their Japanophile behavior is paradoxal term. This thesis, based on examining over about colonial discourse during the latter Japanese Imperialism and next try to study the relation of colonial discourse and Japanophilism.